



■ 연구보고서 2014-22-1-1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이삼식·이지혜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4-22-1-1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이삼식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정가 6,000원

발간사 <<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의 저출산 현상을 지난 30여 년 동안 경험하였으며, 2001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지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 가까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다. 저출산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실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으로부터의 탈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기 구분 없이 198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시기별로 초저출산현상으로서의 진입을 촉진하였던 시기와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후의 시기, 그리고 초저출산현상 진입 후 변화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은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여러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명료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정책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현 명예교수, 본 원의 이상림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15
제1절 선행연구 고찰	17
제2절 외국사례 고찰: 독일 사례	24
제3절 본 연구에의 함의	46
제3장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인구학적 원인	51
제1절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53
제2절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	56
제3절 출산율 변화의 요인분해	61
제4절 템포효과 분석	78
제5절 인구학적 원인에 대한 종합논의	86

제4장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사회경제적 원인	89
제1절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산행태 차이	92
제2절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116
제3절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132
제4절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한 종합논의	141
제5장 초저출산현상 탈피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145
제1절 유배우율에 관한 정책과제	147
제2절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접근	152
제6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71

표 목차

〈표 2- 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6
〈표 2- 2〉 독일의 출생코호트별 자녀수별 비율	33
〈표 2- 3〉 독일의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율, 2012	34
〈표 3- 1〉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56
〈표 3- 2〉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과 폭	57
〈표 3- 3〉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	59
〈표 3- 4〉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67
〈표 3- 5〉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71
〈표 3- 6〉 합계출산율, 유배우합계출산율 및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74
〈표 3- 7〉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78
〈표 3- 8〉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및 합계출산율	79
〈표 4- 1〉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96
〈표 4- 2〉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거주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	98
〈표 4- 3〉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	101
〈표 4- 4〉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104
〈표 4- 5〉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106
〈표 4- 6〉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평균 출생아수	109
〈표 4- 7〉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	114
〈표 4- 8〉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모형: 변수	117
〈표 4- 9〉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1(모형1-1)	119
〈표 4-10〉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6(모형1-2)	120
〈표 4-11〉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11(모형1-3)	121
〈표 4-12〉 여성(25~34세)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모형 간 비교	125
〈표 4-13〉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1(모형2-1)	126
〈표 4-14〉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6(모형2-2)	128
〈표 4-15〉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11(모형2-3)	129

〈표 4-16〉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모형 간 비교	132
〈표 4-17〉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1(모형3-1)	134
〈표 4-18〉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6(모형3-2)	136
〈표 4-19〉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11(모형3-3)	138
〈표 4-20〉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모형 간 비교	141
〈표 4-21〉 초저출산 지속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종합	144

그림 목차

[그림 2- 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0
[그림 2- 2] 독일의 초산연령 변동 추이	31
[그림 2- 3] 독일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32
[그림 2- 4] 독일의 혼외출산비율 변동 추이	35
[그림 2- 5] 독일정부의 저출산 대응: 기본구조	38
[그림 2- 6] 본 연구의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48
[그림 3-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54
[그림 3- 2] 한국과 프랑스의 혼외출산비율 변동 추이	62
[그림 3- 3]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혼인건수 분포	63
[그림 3- 4]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분포	64
[그림 3- 5] 여성의 초혼연령 변동 추이	65
[그림 3- 6]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변동 추이	66
[그림 3- 7]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69
[그림 3- 8] 합계출산율, 유배우합계출산율 및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비교	75
[그림 3- 9]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80
[그림 3-10] 1992~1997년 간 템포효과	82
[그림 3-11] 1997~2005년 간 템포효과	83
[그림 3-12] 2005~2013년 간 템포효과	84
[그림 3-13] 1992~2013년 간 템포효과	85
[그림 4- 1] 가임기 기혼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생진도비 (35~39세, 40~44세, 45~49세) 94	
[그림 4- 2] 가임기 기혼여성의 거주 지역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97
[그림 4- 3] 가임기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100
[그림 4- 4] 가임기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103
[그림 4- 5] 가임기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105
[그림 4- 6] 가임기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107
[그림 4- 7] 가임기 기혼여성의 직업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110

Abstract <<

Causes of Continued Lowest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Korea has been experiencing lowest low fertility since 2001.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auses of continued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e found the demographic causes using the decomposition of TFR. During 1992~1997, the decline of both marriage rate and marital fertility, mainly the marriage rate, made TFR decrease steadily. During 1997~2005, the marriage rate decline overwhelmed the increase of marital fertility, causing TFR to decrease under the lowest low level. From 2005 to 2013, although the marriage rate decreased steadily, TFR increased a little due to the increase of marital fertility. And the tempo effect accelerated the drop of fertility to lowest low level. The socio-economic causes of lowest low fertility derived from parity progression ratio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the rapid decline of fertility from those who had traditionally shown high level of fertility like low-educated, self-employed, workers in the farm or fishing industry, etc.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future policies need to devote themselves to on one hand, eliminating barriers against marrying earlier and, on the other hand, supporting for the ever-married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they desi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였던 시기(1992~1997년)와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후 시기(1997~2005년), 초저출산현상 진입 후 변화 시기(2005~2013년)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 고찰, 외국 방문 면담, 인구학적 기법 적용, 다변량분석 실시 등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을 분해한 결과 1992~1997년에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부적 영향력 모두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특히 만혼화가 주도적 역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7~2005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3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을 상회하여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유배우출산율의 증가 크기가 미세함에 따라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연기 효과(템포효과)는 1992~1997년간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97~2005년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간에도 여전히 출산연기 효과가 일정

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수준 발생하고 있어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초저출산현상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결과, 특히 셋째아 출산을 이행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집단인 저학력층, 자영업자, 농림어업, 단순노무, 장치·기계조작, 기능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등일수록 강하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것이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변량 분석 결과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만 차이가 나타나 저출산현상이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확대되어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나 학력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줄어들어 2011년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 가임기 가구의 전월세 비율은 모든 시기에 유배우율을 낮춘 반면, 2006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인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점유형태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주거불안정이 출산율을 전국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저출산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일관되게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고출산 집단이었던 비임금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 행태가 임금근로자와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직업 중에서는 사무종사자 비율이 2001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데, 2006년에는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외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으로 갈수록 고출산 직종 종사자들의 출산율이 낮아져 직종 간 차이가 미세해졌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향후 정책은 초저출산현상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원인에 근거를 두고 개발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원인으로 만혼화가 심화되어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유배우출산율 상승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만혼화를 억제하여 유배우율 하락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만혼화를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배우출산율도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결혼의 용이성을 제고하여 유배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취업준비 단축 지원, 일-결혼 양립 지원, 주거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유배우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과제로는 건강한 임신 보장, 출산간격 단축 지원, 비용지원, 시간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은 두 경로(track)로 과거부터 저출산 성향이 강하였던 집단과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되,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은 후자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향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출산순위에 의거하여 확연한 차별을 뒀으로써 예산 집행을 추가출산 이행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들 간 조화(best policy mix)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특정한 정책 하나에 보다 집중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라도 다른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배우율이나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선택-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초저출산, 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 사회경제적 원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현상의 기준이 되는 1.3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명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경우 그에 기반한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출산율 변화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행태 변화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여성의 출산행태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는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출산행태를 일시적으로 변경시켜,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목표출산율로의 회복에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며, 가장 첫 단계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로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행한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다. 최근에도 많은 연구들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고자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향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행태 등과의 인관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저출산현상 추이에서 초저출산현상 지속 기간에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출산율 회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론적으로 출산율 결정요인의 메커니즘(mechanism)은 결혼 및 출산 행태의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인구학적 원인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많지 않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인구학적 원인과 연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명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정책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4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부문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외국사례를 파악하는데 할애되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주로 분석대상 시기와 분석대상 항목(원인) 및 분석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주로 분석대상 항목(원인 분야)을 규명하고, 아울러 각 항목(분야)별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찰 결과로서 기존연구들의 장점과 한계점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기본틀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대상 외국으로는 독일을 선정하였다. 주된 배경으로 몇 가지 특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최근에 초저출산현상을 벗어났으나 여전히 1.4 미만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육아 및 가사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전통적인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과거 동독과 서독으로의 분단 상태 지속이 인구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인구학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이라는 특정 사건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저출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문은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현상이 시작된 1984년 이래 출산율 변동 추이 상 변곡점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 간 결혼 및 출산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을 구성하는 연령별 출산율의 두 요소로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기별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두 요소 중 유배우율은 만혼화 현상 그리고 유배우출산율은 결혼한 여성의 출산수준을 가늠케 한다. 아울러 만혼화와 더불어 만산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템포효과(tempo effect)를 측정하였다.

세 번째 부문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출산율의 원인 메커니즘(mechanism) 하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을 매개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은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에 맞추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향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 고찰,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 인구학적 기법 적용,

다변량분석 실시 등이다.

문헌 고찰은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국내외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로는 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근에 실시된 국내외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국내의 경우 주로 2000년 이후 연구들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외국의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외국사례 분석은 독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독일의 출산율 추이와 원인 및 정책적 대응을 파악하고자 연구진이 현지출장을 통해 관련 정책 담당자는 물론 전문가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방문 기관으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 연방보건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등이다. 효과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전에 관련 질문지를 담당기관에 송부하였다.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기법(demographic technique)들을 적용하였다. 여기에는 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유배우합계출산율,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템포효과,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 등이 포함된다. 각 기법의 개념, 측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장 및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 인구학적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용되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 인구, 인구동태조사(출생통계, 혼인통계) 등으로 KOSIS를 통해 또는 원 자료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단위는 기초지자체로 230여 개의 사례수를 가진다. 분석은 2단계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이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종속변수로 유배우율과 유배우합계출산율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들을 합성한 결과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두 단계 모두에서 독립변수로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특성(실업률, 취업률, 종사상지위, 직업), 재정변수(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초저출산 현상 지속의 관점을 고려하여 세 시기 즉, 2000~2001년, 2005~2006년, 2010~2011년으로 구분하여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된 인구학적인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태조사(출생통계, 혼인통계) 등으로 KOSIS를 통해 또는 원자료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태조사(출생, 혼인),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재정통계자료, 지방재정연감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착수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수시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외국사례 고찰: 독일 사례

제3절 본 연구에의 함의

2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

제1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시기 즈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통계자료와 방법으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부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실시된 연도순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태헌 외(2006)는 3개년도 인구주택총조사(1980년, 1990년, 2000년)의 원자료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혼인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인상태가 불안정(이혼, 사별)할수록,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사무직인 경우에, 그리고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 출생아 수가 적음을 밝혔다. 이시원 외(2006)는 1995~2002년 간 160개 지자체 단위 통계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지역에서 동일하게 월평균소득, 모 취업, 이혼 및 초산연령이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모 취업이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고 복지비와 모자보건사업이 출생아 수를 증가시켰음을 제시하였다.

김현숙(2007)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0세 이상 여성의 출산자녀수에는 가구소득, 남아선호도, 남편 장남여부 및 농촌(지역)이 정(+)적으로, 그리고 결혼연

령과 학력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현숙(2007)은 18~39세 여성의 예상 출산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 농촌, 남아선호, 부인이나 남편의 형제자매 수는 정(+)적으로, 그리고 결혼연령과 취업여부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섭(2008)은 2003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IMF외환위기 이후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진 부부는 학력수준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졸업 이상 학력 순으로, 직업별로는 농어업직, 단순노무직,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직 등 순으로, 그리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종사상지위의 위세가 낮고 출산수준이 가장 높았던 집단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김두섭(2008)은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의 순으로 출산수준이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 출산수준이 직장의 안정성 및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남편이 개인사업체 종사자인 경우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최성은과 우석진(2009)은 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의 가임기 여성 출산력 자료(직업력은 노동패널 1~10차년도 직업력 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30대 공공부문 종사 여부와 가구소득이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변용찬 외(2010)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령과 읍면지역 거주는 출생자녀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외국출생자, 결혼연령, 이혼 및 별거는 그 반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삼식·최효진·서문희 외(2009)도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입직연령 19세 이하에 비해 20대와 30대 초반 입직 시, 그리고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자녀수를 줄이는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이삼식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시계열자료(1990~2009년)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육아서비스이용률은 합계출산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적 회귀분석 결과 육아서비스이용률이 지역 간 합계출산율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후자의 분석 결과에 대해 보육료 지원정책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역 간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역 간 합계출산율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이삼식 외, 2010).

최준욱·송헌재(2010)가 한국노동패널 2~11차(1998~2007년) 자료에 통합프로빗모형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모의 연령과 경제활동참여는 첫째아 혹은 둘째아 이상을 가질 확률을 낮추고, 기존자녀수, 기존자녀 평균연령 및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둘째아 이상을 가질 확률을 낮추며, 아들이 없었던 가구, 딸이 없었던 가구, 가구소득 등은 그러한 확률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욱·송헌재(2010)가 동일 연구에서 재정패널 2차(2008년) 자료에 프로빗모형을 적용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데, 다만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째아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의 연령과 교육이 둘째아 이상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김은정 외(2011)는 여성가족패널(2007~2008년)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소득계층(소득하위 30%계층, 소득30분위~70분위 이하 계층, 소득상위 30%계층)별로 기대자녀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기간의 정(+)-적 영향과 부인연령의 부(-)적 영향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소득하위 30%계층에서만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그리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거주 시, 대출 이상에 비해 고졸 혹은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소득상위 30%계층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외, 2011).

김현식·김지연(2012)이 한국노동패널 1~11차(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피고용자로 취업한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험모형을 적용한 결과, 종사상지위와 근무시간형태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금은 첫째아와 둘째아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삼식과 최효진(2012)이 20~39세 유배우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특성으로서 점유형태(자가에 비해 전셋집), 주택유형(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및 거주기간(단기간거주)이 출생아수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주거면적은 아주 넓은 경우 출생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철희(2012)는 인구동태조사자료와 추계인구, 인구센서스 2% 표본 및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기(1991~2005년, 2005~2009년)를 대상으로 합계출산율을 분해한 결과, 1991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은 유배우여성(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비율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며, 1991년 이후 유배우출산율 증가(특히 30대 유배우 여성)는 출산율 하락을 상당 정도 상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2. 국외 선행연구 고찰

Frejka and Ross(2001)에 의하면, 서구에서 여성의 초혼율이 196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60%만이 결혼을 하여 임

신할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성은 아시아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 수십 년간 출산율 감소의 상당부분이 결혼 감소 혹은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Kaneko 외, 2008; Sobotka 외,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성은 일본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코호트의 초혼율이 출산율 예측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Retherford, Ogawa and Matsukura (2001)는 일본에서 1973~1975년 동안 만혼화의 원인을 몇 가지 사회현상 즉, 남녀 간의 연령구조 차, 도시화, 교육수준 증가, 경기, 물가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화가 결혼연령과 생애비혼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였지만 교육수준은 남녀가 선호하는 상대방의 교육수준이 서로 달라(남성은 본인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을 그리고 여성은 본인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을 선호) 여성의 초혼연령과 비혼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Retherford 외, 2001). 또한, 이들 연구진은 만혼화의 원인으로 경기후퇴와 물가상승을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경기 후퇴는 1인당 실질 GNP 성장률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져 보다 오랫동안 직장에 남기 위하여 결혼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물가상승도 1인당 실질 GNP 성장률을 감소시켜 주택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젊은 층이 결혼을 연기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Retherford 외, 2001).

외국의 기존연구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경기 등 거시적인 현상의 변화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Sobotka, Skirbekk and Philipov (2011)는 OECD, Council of Europe, Eurostat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80~2008년간 저출산 국가(26개국)들 사이에 GDP가 하락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GDP가 상승하는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발견하

였다. 이와 같은 경기 침체에 따른 출산을 하락은 젊은 층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자녀가 없고 가족형성이나 출산을 위한 공통의 선행요소(안정적 소득, 좋은 주택 구매, 자산 축적 등)들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Sobotka 외, 2011). 실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경기 후퇴에 따른 젊은 층의 경제적 지위의 악화가 주거 독립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가족형성(결혼)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여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ulder, 2006; Rindfuss and Brauner-Otto, 2008; Simon and Tamura, 2009).

일단의 연구들은 실업률 상승이 출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Orsal and Goldstein(2010)은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 1976~2008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률 증가가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Adsera(2011)는 유럽의 높은 여성 실업률이 1980년대 이래 첫째아 출산을 지연시켰으며,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도 다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Kravdal(2002)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르웨이에서 실업률 상승이 1993년의 경기 후퇴 시기 동안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기여를 하였음을 밝혔다. 핀란드에서는 1992년 이후 첫째아 출산은 감소한 반면, 경기침체 기간 동안 둘째아 이상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후퇴와 출산율의 영향을 바꿀 정도의 가족정책 혹은 복지정책이 중요함을 의미한다(Sobotka 외, 2011). Ogura and Kadoda(2008)는 일본의 사례로 2000~2004년 동안 젊은 남성의 실업률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Sobotka 외, 2011에서 재인용). 높은 실업률 등 경기는 특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을 때 출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공분야의 직업은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Sobotka 외, 2011).

경기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성, 교육수준,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성들에게 결혼 장애요인은 저학력, 시간제, 저임금 등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Oppenheimer, Kalmijn, and Lim, 1997). 고용기회 감소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인적자원을 높이는 목적도 있는 반면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학생으로 남아있는 것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받기 때문이다(Sobotka 외, 2011). 이러한 현상은 실제 1980년대와 1990년대 경기가 불안정한 기간 동안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중앙 및 동부유럽에서 대학에 등록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Sobotka 외, 2011),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경기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다소 흐른 뒤에 나타나는 이른바 time lag 효과가 존재한다(Sobotka 외, 2011). 일례로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2007년 5%에서 2009년 10%로 두 배가 되었으나 출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EU 국가에서는 2007년 실업률 변화와 2008년 4/4분기 출생아수 변화가 부적 관계에 있었다(Sobotka 외, 2011).

저출산의 원인을 양성평등이나 가치관 변화 등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Frejka, Jones & Sardon(2010)은 아시아 5개 국가(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에서 모든 출산순위에서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으로 여성의 급격한 고학력화와 더불어 점점 맞벌이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껴 여성들이 노

동시장에 참여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은 가족돌봄을 부담하고, 양성 불평등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성의 육아가사참여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돌봄을 위하여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일시적 변동이 불가능하고, 자녀의 양에 대한 추구에서 질에 대한 추구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동거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혼외출산 비율이 여전히 낮아 결혼의 지연이 자녀 출산 연기 혹은 포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원인도 함께 제기되었다(Frejka 외, 2010).

일단의 연구들은 가족정책이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Rindfuss, Guilkey, Morgan, and Kravdal(2010)은 Norwegian Social Science Data(노르웨이 435개 주에 대한 자료)와 인구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시간분석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분석한 결과 아동돌봄시설 접근성이 35세 여성의 평균 자녀수를 다소나마 증가시킨 것으로 입증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는 출산순위별 이행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제2절 외국사례 고찰: 독일 사례¹⁾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물론, 주요 관점은 각국의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들에 집중하였다. 외국의 저출산 원인 등의 사례를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출산수준의 변동 추이와 더불어 사회현상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을 변동은 어느 특정한

1) 독일 사례는 연구진이 2014년 상반기에 독일 연방연구연구소, 독일 연방보건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 및 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여러 사회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을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독일을 사례 국가로 선정할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였다는 점, 출산율이 낮아진 이후에 다소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성에 대한 사고관이나 사회관행 등이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환경 변화와 출산율 변동 추이 간의 연관성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1. 독일의 저출산 추이와 원인 고찰²⁾

독일의 저출산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인구학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9년 통일이 독일인의 출산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참고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시기는 1989년 11월 9일이며, 통일은 1990년 10월 3일이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경제 현상으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등이 어떻게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이들 세 가지 측면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독일의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이들 세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구동독 주

2) 독일의 저출산 추이와 원인에 대한 고찰 부문은 연구진이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편, 일부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연구진이 현지에서 전문가들과 면담한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민과 구서독 주민 간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5 미만 수준으로 낮았으나 1964년 2.53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출산율은 감소세로 전환하여 1975년 1.48로 다시 1.5미만으로 낮아졌다. 1976~1982년 기간에 1.5대, 1983~1990년 기간에 1.4대로 완만하게 낮아졌다.

〈표 2-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명)

	독일	구서독 주민	구동독 주민		독일	구서독 주민	구동독 주민
1960	2.37	2.4	2.3	1986	1.41	1.3	1.7
1961	2.44	2.5	2.4	1987	1.43	1.4	1.7
1962	2.44	2.4	2.4	1988	1.46	1.4	1.7
1963	2.51	2.5	2.5	1989	1.42	1.4	1.6
1964	2.53	2.5	2.5	1990	1.45	1.5	1.5
1965	2.50	2.5	2.5	1991	1.33	1.4	1.0
1966	2.51	2.5	2.4	1992	1.29	1.4	0.9
1967	2.45	2.5	2.3	1993	1.28	1.4	0.8
1968	2.36	2.4	2.3	1994	1.24	1.4	0.8
1969	2.21	2.2	2.2	1995	1.25	1.3	0.9
1970	2.03	2.0	2.2	1996	1.32	1.4	1.0
1971	1.97	1.9	2.1	1997	1.37	1.4	1.1
1972	1.74	1.7	1.8	1998	1.36	1.4	1.1
1973	1.56	1.5	1.6	1999	1.36	1.4	1.2
1974	1.53	1.5	1.5	2000	1.38	1.4	1.2
1975	1.48	1.4	1.5	2001	1.35	1.4	1.2
1976	1.51	1.5	1.6	2002	1.34	1.4	1.2
1977	1.51	1.4	1.9	2003	1.34	1.4	1.2
1978	1.50	1.4	1.9	2004	1.36	1.4	1.3
1979	1.50	1.4	1.9	2005	1.34	1.4	1.3
1980	1.56	1.4	1.9	2006	1.33	1.3	1.3
1981	1.53	1.4	1.9	2007	1.37	1.4	1.3
1982	1.51	1.4	1.9	2008	1.38	1.4	1.4
1983	1.43	1.3	1.8	2009	1.36	1.4	1.4
1984	1.39	1.3	1.7	2010	1.39	1.4	1.4
1985	1.37	1.3	1.7	2011	1.36	1.4	1.4
				2012	1.38	1.4	1.4

자료: 독일 전체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0월 검색, 구서독 및 구동독 자료는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합계출산율은 통일이 되었던 시기(1990년 10월)인 1990년 1.45에서 1991년 1.33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1992~1995년 기간에는 1.2대로 낮아졌다. 특히 1994년에는 최저점인 1.24로 낮아졌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서 2012년까지 1.3대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뿐이다.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구서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전체 독일인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 중 구서독 주민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구서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1.5수준에서 낮아져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1.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인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구서독 주민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에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전체 독일인의 합계출산율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1960~1970년대에 구동독과 구서독 주민 모두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주된 이유로는 구서독 주민의 경우 '교육 붐'이 일어나면서 여성의 교육 참여가 증가하여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여성운동이 활발해지고, 피임약이 보급되는 등의 영향에 기인한다. 구동독 주민의 경우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임신중절시술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었다(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구서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에도 다소 완만한 속도이나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1.5 수준과 1.4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후반 급격하게 증가하여 1.9수준을 보였고 1980년대에는 다소 감소한 1.7 수준으로 여전히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동독 당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세력 약화를 우려하여 1970~1975년 출산 증가를 위한 가족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영향으로 결혼이 빨라지면서 출생아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1980년대 초부터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구서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 반등으로 인하여 독일인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초까지 다소 보합세를 보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통일 직전부터 이미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정치적 불안감 고조로 하락하였으며, 통일 직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구체적으로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통일 전 1.6~1.7 수준에서 1991년에는 1.0 그리고 1992~1995년 동안에는 1.0 미만의 수준을 나타냈다. 불안한 사회 상황이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반면, 구서독 주민은 이미 사회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이에 따라 독일인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994년 1.24로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통일 직후에 1.2대의 아주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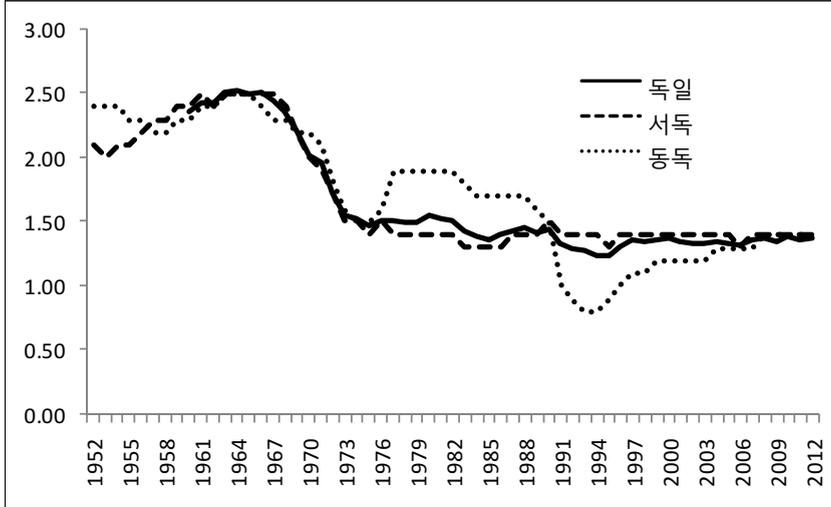
이후 사회 변화와 맞물려 1990년대 말경에 사회가 통합이 되고 안정되면서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후반 1.1 수준, 2000년대 전반 1.2 수준, 2000년대 중반 1.3 수준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1.4 수준으로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구서독 주민의

수준과 어느 정도 유사해졌다. 이에 따라 독일 전체의 합계출산율도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약간 상승하여 최근에는 1.35~1.39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실로 통일이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요인이 출산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통일 전후 약 5년 간 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구서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30년간 사회가 큰 변화가 없어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사회가 안정되면서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은 구서독 주민의 수준과 차이가 좁혀져 최근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인구학적인 이유로는 구동독 주민들은 무조건 한명을 낳는데, 구서독 주민은 자녀가 없든가 낳으면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둘을 낳든가 해서 평균적으로는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간에 거의 일치하게 된다(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면담내용 중 일부).

이와 같이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통일 직후 구동독 주민의 합계출산율 회복세에 따라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통일 직후인 1994년 1.24(최저점)에서 2012년 1.38로 불과 0.14 증가하는데 그쳐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4미만)에서 지속되고 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3미만에서 지속된 기간은 4년간(1992~1995)에 불과하나 1.4미만에서 지속되어 온 기간은 1991년 이래 2012년까지 22년간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미만에서 지속되어 온 기간은 1983년 이래 최근까지 30년간으로 나타난다.

[그림 2-1]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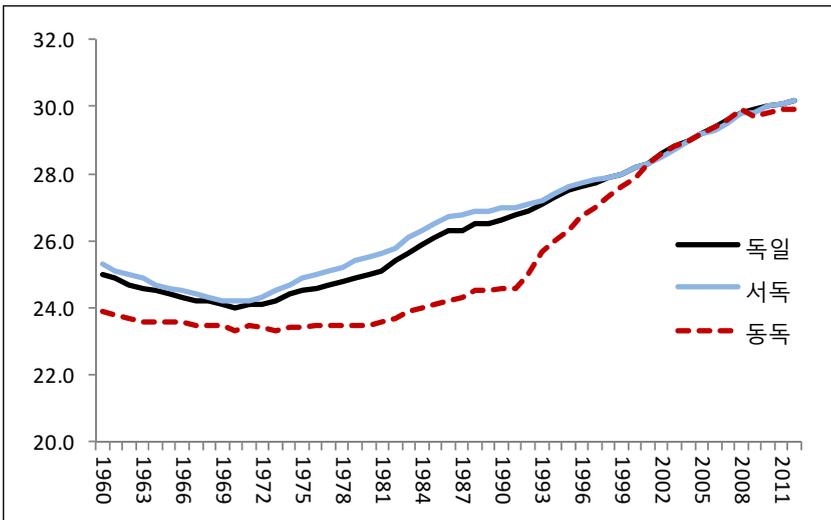
자료: 독일 전체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0월 검색, 구서독 및 구동독 자료는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독일의 저출산현상의 장기화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만산화 경향과 무자녀 선호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선 만혼화와 관련한 만산화 정도는 초산연령으로 측정할 수 있다. 독일인의 평균 초산연령은 197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산연령은 1960년 25.0세에서 1970년 24.0세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1980년 25.0세, 1990년 26.6세, 2000년 28.2세, 2010년부터 30.0세로 진입하여 2012년에는 30.2세로 나타났다.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의 평균 초산연령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서독 주민의 경우 전체 독일인의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동독 주민의 초산연령은 구서독 주민에 비해 낮으며, 통일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구동독 주민의 초혼연령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구서독 주민과 유

사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통일 전후를 비교해보면 구서독 주민의 초산연령은 이전의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구동독 주민의 초산연령은 이전의 완만한 증가세에서 아주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구동독 주민의 추이는 통일 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2-2] 독일의 초산연령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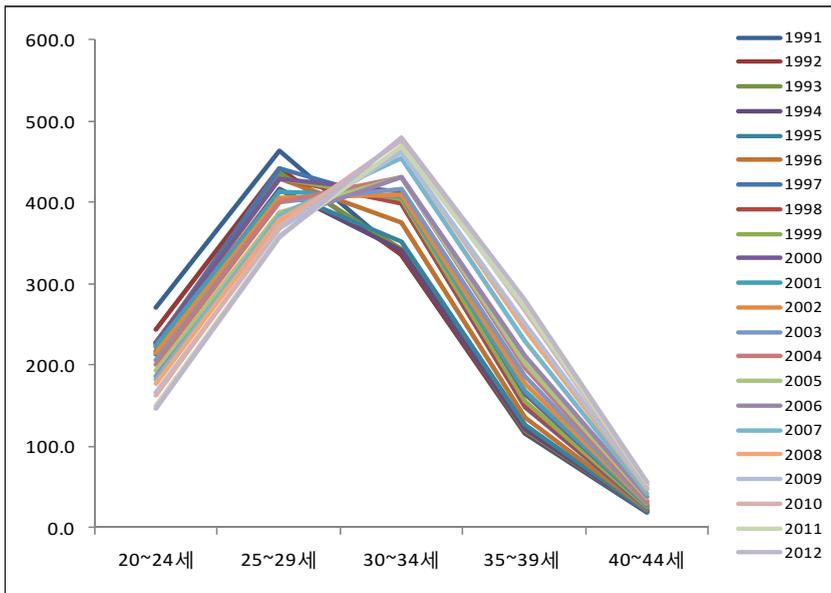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초산연령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산연령이 증가하면서 연령별출산율은 과거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점차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두 연령층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 초 25~29세 출산율 수준과 최근 30~34세 출산율 수준은 아주 유사하다. 또한, 1990년대 초 25~29세 출산율과 30~34세 출산율 간의 차이와 최근 30~34세 출산율과 25~29세 출산율 간의 차이가 방향만 다를 뿐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1990년대 이래

32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최근까지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대신 1.3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3] 독일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다음으로 무자녀 추이를 살펴보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이 거의 완결된 코호트들의 무자녀 비율을 살펴보면, 1937~1942년 코호트의 경우 11.5%에서 1968~1972년 코호트의 경우 22.4%로 거의 두 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자녀 비율이 최근 23%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2자녀 이상의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무자녀 비율은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독 주민의 무자녀 비율은 1968~1972년 코호트의 경우 24.7%로 동일 코호트의 구동독 주민

1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무자녀 비율의 증가는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4미만의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표 2-2〉 독일의 출생코호트별 자녀수별 비율

(단위: %)

출생코호트(연령)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무자녀비율	
						구서독 주민	구동독 주민
1937-1942(70-75)	11.5	22.9	37.1	17.5	10.2	11.9	8.1
1943-1947(65-69)	11.8	26.2	40.2	14.4	6.3	12.6	7.5
1948-1952(60-64)	13.9	26.7	39.5	13.1	5.3	15.3	7.2
1953-1957(55-59)	15.9	24.3	39.4	12.4	5.2	18.3	7.3
1958-1962(50-54)	17.6	22.7	37.9	12.5	4.8	20.4	8.4
1963-1967(45-49)	20.0	23.2	35.4	11.4	4.2	22.6	11.5
1968-1972(40-44)	22.4	23.0	34.2	11.0	4.2	24.7	15.8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무자녀 비율은 대체적으로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독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무자녀 비율은 19.7%, 직업교육(기초교육에 해당)을 받은 경우 19.3%, 전문학교 졸업 22.1%,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 29.6%로 학력 간 최대 10%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 교육수준에서 구서독 주민의 무자녀 비율이 구동독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서독 주민의 경우 전문학교 졸업 27.6%,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 3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동독 주민의 경우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9.4%로 다른 교육수준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 증가가 무자녀 선호도를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표 2-3〉 독일의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율, 201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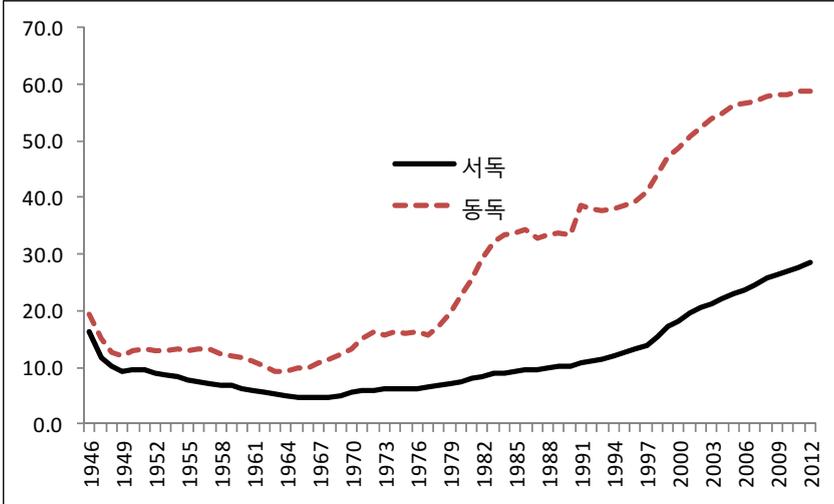
교육수준	전체	구서독 주민	구동독 주민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수준	19.7	18.9	29.4
기초교육(직업교육) 수준	19.3	20.8	10.6
전문학교 수준	22.1	27.6	10.1
전문대학/대학교육 수준	29.6	32.0	13.6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유럽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혼외출산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혼외출산 비율의 상승이 합계출산율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가구가 8백만 가구 정도이며, 이중 결혼한 부부는 2012년 71%(1996년 81%), 한부모 20%(1996년 14%), 결혼안한 커플(동성 포함, 동반자 등) 9%(1996년 5%) 등이다(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담당자 인터뷰 중 제공 자료). 구동독 주민은 구서독 주민에 비해 결혼한 부부가 적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과 한부모가 상대적으로 많다(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담당자 인터뷰 내용 중). 실제 추세를 보면, 독일에서도 혼외출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구동독 주민에게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구동독 주민의 혼외출산 비율은 1963년 6.3%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최근에는 거의 60% 수준(2012년 58.8%)에 육박하였다. 구서독 주민의 혼외출산 비율은 1966년 4.6%를 최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28.4%로 나타났다.

[그림 2-4] 독일의 혼외출산비율 변동 추이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구서독 주민에 비해 구동독 주민의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구동독 여성들이 구서독 여성들에 비해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경제적 자치권이 있어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등 가족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신앙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³⁾. 특히, 구동독 여성의 혼외출산 비율이 1976년에서 1980년대 이후로 높게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파들이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구서독 여성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교회(성당)에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혼외출산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이전에는

3) 통일 당시 동독의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동독의 젊은이들이 군대식으로 정서가 형성되어 있어 있다가 자유가 주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담배, 술, 학교 결석 등이 증가하고, 교사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젊은이들이 방임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독일 연방보건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멸시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이 무시되어서도 안되고 정책적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혼인출산이 감소하고 대신 혼외출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출산은 동일하게 된다. 즉, 혼외출산 비율은 높아지지만 결혼출산 비율이 그만큼 낮아져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독일에서 전반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과 연동하고 있다. 현재 매년 67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안에 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합계출산율은 1.3대 수준이지만 완결출산율은 1.62로 나타난다. 완결출산율 역시 1.8에서 1.6으로 낮아진 것이다. 합계출산율과 완결출산율 간의 차이는 템포효과에 기인한다. (이상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독일 통일로 인하여 유럽연합이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동유럽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왔는데,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며, 그 예로 통일 이후 구동독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이주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전 유럽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젊은이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옮겨지면서 그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 사례로 많은 동유럽 사람들이 아일랜드로 이주하였으나, 아일랜드 은행이 파산되면서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럽이 연합되면서 폴란드 등 동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로 와서 노인들을 간병하는데 종사하고 있다. 폴란드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독일로 이주하면서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들 이주민이 일시적으로 독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만약 이들 이주민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아일랜드 사례처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상은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2. 정부의 대응에 관한 고찰⁴⁾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 동안 인구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저출산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⁵⁾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와서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 증가했다. 독일은 과거 나치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대로 말하기가 상당히 두려워 저출산 대응이라는 주제들이 터부(taboo)시 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슈미트가 인구가 부족하여 독일에 아이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변혁’에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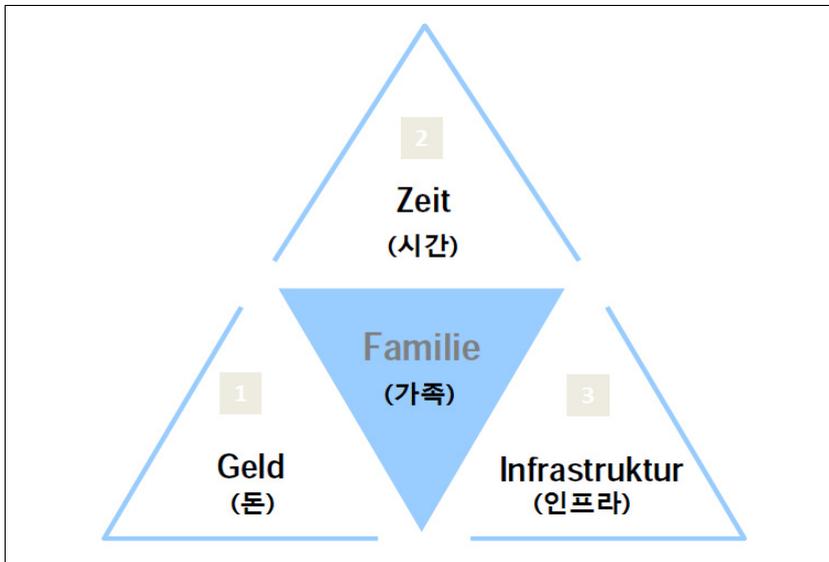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에 가족법이 개정되었다. 실제 가족법 개정의 배경은 출산율 증가의 목적보다는 전체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형성, 가족형성을 위한 결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가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개정을 했고, 특히 일과 가

4) 정부의 대응에 관한 고찰은 별도의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은 연구진이 독일 현지출장 중 독일 연방인구연구소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전문가들과의 면담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5) 독일정부는 적정출산율 또는 목표출산율을 특별히 설정해 놓지 않고 있으나 1.6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족의 양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독일 가족정책의 목표는 일 가정 양립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가족의 경제적 안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배려, 아이를 원하는 경우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 여러 세대가 함께 연대하도록 하는 것(가족연대)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현금 지원, 시간 지원,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금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육아수당(부모수당) 등이고, 시간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부모시간제 등이며, 인프라 구축은 보육시설, 유치원 확충 등이 포함된다.

[그림 2-5] 독일정부의 저출산 대응: 기본구조



자료: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담당자 인터뷰 중 제공 자료.

가. 현금 지원

독일에서 경제적 지원정책 중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⁶⁾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출산 장려의 목적이 강하다(이진숙, 2012).⁷⁾ 독일에서는 육아휴직(현재 부모시간) 기간 동안 휴직 전 임금의 67% 수준의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진숙·김태원, 2014)⁸⁾.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지급하되, 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 무직자나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최소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인 가정 또는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에게는 수당의 1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이진숙, 2012). 부모의 육아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수당은 2013년에 총 50억 유로 정도가 지출되었다.

나. 인프라 구축

유럽의 한 사례를 들면 두 사람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 취업여성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다 낳은 후에 다시 직장생활을 하려고

6) 자녀가 수입 없는 학생이거나 직업교육 중이라든가 임의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5세까지 지급한다.

7) 2009년 1월부터 첫째아와 둘째아에게는 월 164유로, 셋째아에게는 월 170유로, 넷째아 이상에게는 월 195유로로 지급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김상철, 2009).

8) 부모시간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될 시간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을 참조하도록 한다.

한다. 그 경우 다시 성공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이 향상되는 등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싶는데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린 자녀(0-2세)에 대해서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과 일 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독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1살까지는 직접 키운다는 생각인 반면, 프랑스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엄마들에 의한 직접 양육은 생후 8개월, 15개월 등 부모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거하며, 법적인 조치는 의미 없다. 평균적으로 0~2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3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향상 문제로 유치원의 반당 아이 수,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 질적 측면에 관심이 높다.

최근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는데, 주된 이유로 재정적 소요가 크기 때문이다. 3세 이상 모든 아동은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0~2세 아이를 위한 보육시설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0~2세) 비율은 2013년 29.3%이다. 이 비율은 동독 지역의 경우 49.8%로 서독 지역의 24.2%에 비해 높는데, 이는 동독 지역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였던 관행으로 인해 보육시설이 보다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육관련 모든 재정은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에 따라 시설에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시간이나 부모가 지불해야 되는 시간 등이 다르다. 시설은 크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전적으로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지불액이 구분된다. 보통 교육 기능과 탁아 기능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고 교육과 관련

되면 무료이다. 대부분 유치원은 무료인데 보육 정도를 높이려면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하루 종일 봐주는 소규모 탁아소나 일반유치원이 아닌 기관들은 비용이 훨씬 더 비싸 이를 어떻게 보충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업의 직장보육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로 대기업) 스스로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계약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시설이 있으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독일에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직장보육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다. 시간 지원

독일에서는 모성휴가(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정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한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 외, 2009). 독일의 육아휴직(Erziehungsurlaub)은 1986년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을 도입한 이래, 1993년 이후부터는 통일 후 격차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최장 3년간으로 연장하였고 수당 지급기간도 24개월로 확대하였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 외, 2009). 200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이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변경되었는데, 부모시간은 자녀가 만 3세까지 부모 동시 취득이나 분할 취득이 가능하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 외, 2009).

현실적으로 부모수당(종전 육아수당)은 전체적으로 14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은 기본적인데 나머지 2개월은 남성이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2개월 동안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30% 정도이다. 남성은 2~3개월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 남성에게 휴직을 제공하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만약 허용되지 않는다면 남성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으며, 이와 관련 연방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여성이 휴가(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들 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들은 자녀가 생후 8~12개월이 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프랑스 여성의 2~3개월에 비해 길다. 기업에서도 1년이 지나고 나서 복직하려고 하면 받아야 한다. 고용주 역시 여성이 휴가휴직 후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빨리 돌아와서 빨리 일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휴가 전에 다녔던 기업에서 파트타임이 가능하고,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2012년 46%로 네덜란드 77%에 비해서 매우 낮지만, 파트타임 근무 여성의 주당 근무시간은 2012년 18.6시간으로 스웨덴 25.1시간, 네덜란드 20시간 등에 비해 적다.

현실적으로 독일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은 직장을 정할 때 수입뿐만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근로여건 즉, 앞서 언급한 보육시설이나 육아휴직 이용 가능성, 복직 후 재교육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지정해 놓으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피고용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 가족연대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2004년에 일과 가족생활을 개선하고 특히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하여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차원에서 창립하였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정치, 행정, 기업, 노동조합, 자원봉사기구, 사회 기관, 전문대학, 교회 등으로부터 파트너를 모아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만들며, 지역사회의 상황과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가족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연대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용이 실제 실현가능한지를 실험적으로 실시해 보면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2014년 3월말 현재 669개가 존재한다. 이들 중 2/3 정도가 5년 이상 된 곳이며, 80개의 독일 도시들 중 69지역(86%)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연대가 있다. 2012년 270곳의 지역연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연대의 90% 이상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슈는 일-가정양립(94%), 아동 양육(94%), 가족지향적 환경과 가족시간 정책(92%) 등이다. 그 외에 기업 협력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관한 연대는 73%, 일과 가족 돌봄 책임 양립에 관한 연대는 56%로 나타난다.

연방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역연대를 만들도록 하고, 기존 연대에 대해서는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연대와 계속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조언을 해주면서 지역연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어떻게 연대를 만들고 확장시키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정보나 좋은 사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연대는 연방 기구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 지역연

대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연대는 주로 지자체(79%)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현금과 현물 자원은 지역의 회사나 다른 연대 파트너들로부터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연대는 재단이나 공공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을 모으기도 한다.

3.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⁹⁾

최근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인구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가족정책은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현금, 보육시설·교육 인프라, 시간지원, 남녀평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가족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식이 돈보다는 나머지 세 가지를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2년 전부터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반드시 비용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시간과 연계해서 운영시간을 조절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시간을 지원하고, 만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을 돕거나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으며, 내가 아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이도 함께 돌볼 수 있는 상호 돌봄 지원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만약 돈이 있으면 은행에

9) 정부의 대응에 관한 고찰은 별도의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은 연구진이 독일 현지출장 중 독일 연방인구연구소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부 전문가들과의 면담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저금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운영하는 정책인 것이다. 요컨대, 독일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금 지원보다 시간 지원, 문화적 지원, 시설지원 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일부 저소득층 부모들은 현금 지원을 원하지만 연구 결과 대부분 부모는 시간과 유연성, 문화적 지원 등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을 가장 원하고 있다. 실로 가족법 개정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목적보다는 가족생활을 쉽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과 가족의 양립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¹⁰⁾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많이 높이지는 못했지만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여 여성들이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고, 이런 정책마저 없었다면 합계출산율이 훨씬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특정 집단에는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출산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고학력 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보다 많이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이들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0)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직접적인 조치가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운동, 인권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어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이를 위한 휴가나 법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이를 낳았을 때 법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보장이 이를 이루고 있다. (이상 독일 연방보건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제3절 본 연구에의 함의

1. 선행연구의 함의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점(주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일부만이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인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한 원인의 영향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고 또한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시계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출산율 수준이나 변화 상 특징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단 국내의 기존연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국의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들을 탐색하거나 특정 현상과 출산수준 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접근방법으로 모형에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켜 출산수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병렬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한계성이 발견된다.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두 요인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인과구조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이 분석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구조(causality)의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분석대상 시점이 전체적인 출산율 변동 추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분석대상 시점에서의 출산수준 자체와 출산율 변화 특징 등)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성이 존

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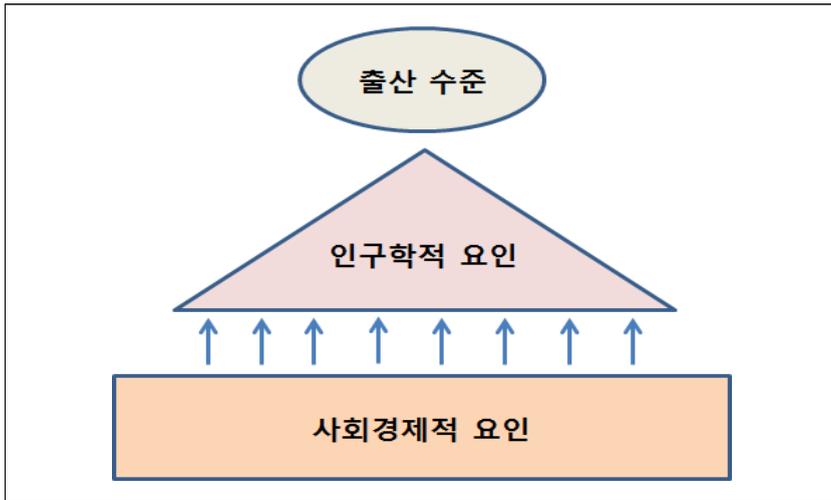
국내와 외국의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출산수준 감소의 원인으로 우선적으로 만혼화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연구들이 만혼화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이나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면, 외국의 기존연구들은 만혼화와 사회경제현상 간의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여 실제 출산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이른바 원인구조적인 접근에 보다 충실하였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와 국외연구 모두 만혼화와 출산율 감소의 두 인구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인 분석이나 영향력의 방향이나 차이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외 기존연구들은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경기(실업 등), 교육수준, 고용형태(직업, 종사상지위 등), 주거 독립성(또는 주거 부담), 양성평등,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결혼율이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나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요인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의 방향이나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의 시사점을 토대로 기본적인 연구틀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저출산 기간을 포함한 저출산 기간을 출산율 수준, 변동 상 특징 등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별로 출산수준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을 다양한 인구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실제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을 계량화한 후 시기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기별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만혼화(유배우율)와 유배우출산율이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시기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을 매개로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시기 간에 비교를 실

시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구조를 체계화하였다. 끝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구조와 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방향 및 수단 등을 논의하였다.

[그림 2-6] 본 연구의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2. 독일 사례의 함의

독일의 사례에 대한 고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나는 출산율 변동 추이의 원인과 관련된 함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의 접근 방향과 관련한 함의이다. 우선 독일의 저출산 원인과 관련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는, 독일의 출산율은 통일 등 특수한 상황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은 극히 일시적으로만 발생하였을 뿐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

리나라의 초저출산현상 지속은 그 전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1.4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거의 초저출산율에 가까운 수준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주로 가족형성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직후에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구동독 주민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심지어 1.3 미만까지 낮아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도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일(특히 전문직)을 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함으로써 가족형성과 가족생활이 불안정하여 결과적으로 여전히 출산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족형성 등에 관한 검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는, 독일의 전통 보수주의적 가족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가 부족한 것도 출산율의 본격적인 반등세를 지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문화의 변경 없이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독일의 사례에서 독특한 것으로 특히 구동독주민 사이에 혼외출산 비율이 높게 나타나나, 이것이 바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로는 혼외출산 비율이 증가한만큼 혼내 출산비율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 수준은 그대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 일부에서 혼외출산 비율의 증가가 합계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책적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측면

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둘째아 이상 출산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무자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가시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구동독 주민의 출산은 첫째아 출산에서 멈추는 경향이 높고, 구서독 주민의 경우에는 둘째아 출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무자녀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독일의 합계출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자녀 부부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독일의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고찰의 함의이다.

첫 번째로는, 독일은 최근 5년 동안 현금 지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인프라 확충과 시간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출산율 변동 추이를 감안하면 정책들이 반드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종류와 함께 어떠한 정책이라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두 번째로는, 독일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금 지원 정책과 시간 지원 정책, 인프라 확충 정책 및 양성평등 제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차이는 우리나라 정책이 보육료 지원에만 예산 투입을 집중하고 있고 다른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몇몇의 정책들 모두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제3장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인구학적 원인

제1절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제2절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

제3절 출산율 변화의 요인분해

제4절 템포효과 분석

제5절 인구학적 원인에 대한 종합논의

3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 인구학적 원인

제1절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 동안 갖게 될 평균 자녀수)은 1960년 6.0에서 20여년이 지난 1983년에 1/3수준인 2.06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 미만인 저출산현상이 30년 동안(1984~2013)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이 지속된 지난 30년은 네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1984년부터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1992년까지이다. 이 기간 중 1984년에는 정부가 '49시책'을 발표하여 출산억제정책을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로 출산율이 더 낮아져 1986~1990년 동안 1.5명대에 머물렀다.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상승하여 1992년에 1.76까지 높아졌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감별 후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가 상용화된 데다가 1990년 백마띠 등의 영향으로 그간 연기되었던 출산이 1991~1992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효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기간은 1992년부터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까지이다. 이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정부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은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였던 시기로 간주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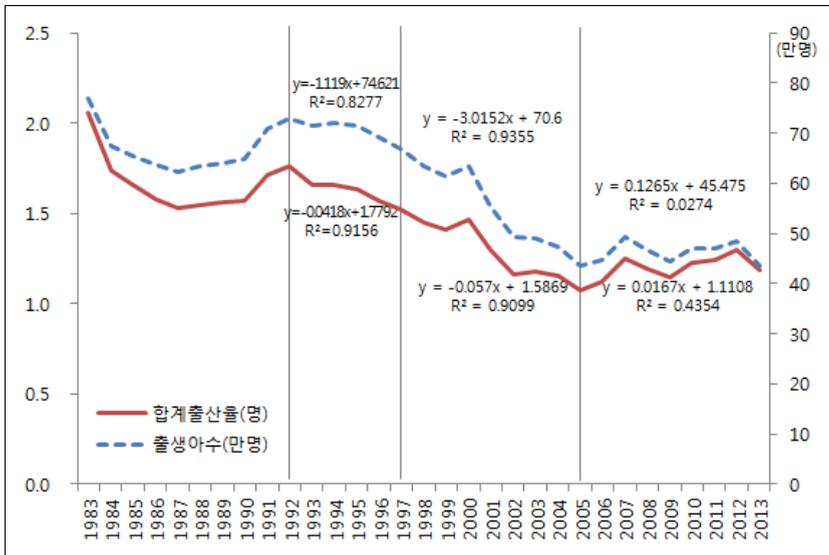
세 번째 기간은 IMF 외환위기 발생 시기부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1.08)에 도달한 2005년까지이다. 이 기간에 인구자질향상정책이 시행되었다. 1998년에는 1997년 말 IMF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합

5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5미만으로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에는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 효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 기간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후의 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

네 번째 기간은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에 도달한 2005년 이래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이다. 이 기간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추진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2년 흑룡해 등의 연도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즉, 이 기간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후 변화 시기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림 3-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주: 여기에서 기울기 b는 기간별로 변화 정도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추세식에 의거하여 산출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합계출산율이 다시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던 1992년부터 최근 까지 기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속도를 살펴보았다. 1992~1997년 기간에 추세식의 기울기(b)는 $-0.0418(R^2=91.6)$, 1997~2005년 기간 기울기(b)는 $-0.0570(R^2=91.0)$, 2005~2013년 기간 기울기(b)는 $0.0167(R^2=43.5)$ 로 각각 나타났다. 1992~1997년과 1997~2005년 두 기간에 합계출산율 변화 기울기는 모두 마이너스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7~2005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의 감소 속도가 1992~1997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2005~2013년 기간에 합계출산율 변화 기울기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명력이 50% 미만으로 그만큼 불규칙하게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출생아수의 변화 속도도 합계출산율의 변화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생아수의 변화 기울기(b)는 1992~1996년 기간에 -0.1119 , 1997~2005년 기간에 -3.0125 , 2005~2013년 기간에 0.165 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서 구분한 기간별로 출산율 변동을 유발한 인구학적인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이함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였던 시기(1992~1997년),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후 시기(1997~2005년), 초저출산현상 진입 후 변화 시기(2005~2013년) 등의 기간별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

합계출산율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변동 추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변화 방향 및 변화 폭을 살펴보았다. 우선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30대와 40대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각 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24세 출산율과 25~29세 출산율은 197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30~34세 출산율과 35~39세 출산율은 1987년을 그리고 40~44세 출산율은 1989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15~19세 출산율은 1970년 이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45~49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표 3-1〉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

	연령층							TFR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83	13.0	146.7	183.6	54.3	14.2	4.0	0.8	2.08
1992	4.4	84.1	189.3	64.6	12.0	1.7	0.2	1.78
1997	3.0	54.2	159.7	71.5	15.4	2.3	0.2	1.52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8
2013	1.7	14.0	65.9	111.4	39.5	4.8	0.1	1.1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3년을 기준(1983=100)으로 한 시기별 상대적인 변화폭과 함께 시기별 증감률을 산정하였다. 우선 1983=100으로 산정해 보면, 감소폭이 큰 연령층은 1997년에 15~20세, 45~49세, 20~24세, 25~29세 등의 순이나, 2005년에는 20~24세, 15~19세, 45~49세, 25~29세 등의 순이며 그리고 2013년에

는 20~24세, 45~49세, 15~19세, 25~29세 등의 순이다. 2013년 20~24세 출산율은 1983년 수준의 10%에 불과한 것이며, 15~19세 출산율은 13%로 그리고 25~29세 출산율은 36%로 각각 감소한 것이다. 증가폭은 1997년과 2005년에 30~34세, 35~39세, 40~44세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에 35~39세 출산율은 1983년 수준의 278%로 30~34세 출산율의 205%, 40~44세 출산율의 12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간별로 증감률을 보면, 1992~1997년 기간에는 20~24세, 15~19세, 25~29세, 45~49세 순으로 감소율이 높고, 40~44세, 35~39세, 30~34세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1997~2005년 기간에는 20~24세, 25~29세, 15~19세 순으로 감소율이 높고, 35~39세, 30~34세, 40~44세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5~2013년 기간에는 45~49세, 25~29세, 20~24세 순으로 감소율이 높고, 35~39세, 40~44세, 30~34세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과 폭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

	연령층							TFR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83=100								
19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2	34	57	103	119	85	44	29	86
1997	23	37	87	132	108	58	24	73
2005	16	12	50	150	132	60	24	52
2013	13	10	36	205	278	120	12	57
증감률								
1992~1997	-32.1	-35.6	-15.6	10.7	28.0	32.2	-15.1	-14.6
1997~2005	-30.0	-67.2	-42.6	14.0	21.4	4.3	0.0	-29.2
2005~2013	-19.0	-21.3	-28.1	36.7	111.2	100.0	-50.0	10.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기간별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 1,000명당 연령 각세별 평균치로 산정한 연령별 출산율을 합계출산율 산정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여성 1명당 연령구간(여기에서는 5세) 내 연령 각 세별 출산율의 합을 산출하였다. 즉, 5세 연령별 출산율/1000×5로 산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연령별 1명당 전체 출산율의 기간 내 변화량을 합계출산율의 변화량으로 나누어 연령별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기여도의 부호가 정(+)인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인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1992~1997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당 0.26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20~24세 연령층은 59.7% 그리고 25~29세 연령층은 59.0%를 기여(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하여 두 연령층의 영향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를 13.8%만큼 그리고 35~39세 연령층은 6.7%만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층들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였다. 이 기간에 20대가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118.7%로 30대가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정도 20.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이다.

1997~2005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44명이 감소했다. 20~2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의 39.6% 그리고 25~29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의 74.0%를 각각 기여하여, 25~29세 연령층이 합계출산율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감소를 10.9%만큼 그리고 35~39세 연령층은 3.6%만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층들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은 미세하였다. 이 기간에도 20대의 부적 기여도(113.6%)가 30대의 정적 기여도(14.5%)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이다.

2005~2013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당 0.11명이 증가하였다. 20~2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16.5% 그리고 25~29세 연령층은 112.2%을 기여하였다. 반면, 30~34세 연령층은 합계출산율 변화를 130.0% 그리고 35~39세 연령층은 90.4%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다른 시기에 볼 수 없는 특징으로 40~44세 연령층도 합계출산율 변화를 10.4%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나머지 연령층들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였다. 이 기간에는 20대의 부적 기여도(128.7%)에 비해 30~44세의 정적 기여도(220.4%)가 상대적으로 높아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다소나마 증가한 것이다.

〈표 3-3〉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

(단위: 명, %)

	연령층							TFR 증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변화량 ¹⁾								
1983~1992	-0.04	-0.31	0.03	0.05	-0.01	-0.01	0.00	0.30감소
1992~1997	-0.01	-0.15	-0.15	0.03	0.02	0.00	0.00	0.26감소
1997~2005	0.00	-0.18	-0.34	0.05	0.02	0.00	0.00	0.44감소
2005~2013	0.00	-0.02	-0.13	0.15	0.10	0.01	0.00	0.11증가
기여도								
1983~1992	-14.3	-103.9	+9.4	+17.0	-3.6	-3.7	-1.0	100.0
1992~1997	-2.8	-59.7	-59.0	+13.8	+6.7	+1.1	-0.1	100.0
1997~2005	-1.0	-39.6	-74.0	+10.9	+3.6	+0.1	0.0	100.0
2005~2013	-1.7	-16.5	-112.2	+130.0	+90.4	+10.4	-0.4	100.0

주: 1) 기여도의 방향으로 정(+)-적은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적은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표 3-1〉을 이용하여 산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992~1997년과 1997~2005년 두 기간에는 20대 출산율의 감소폭이 너무 커, 만혼화와 만산화에 따라 30대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20대의 감소폭을 보충하지(catch-up) 못하여 추가적인 합계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2~1997년 기간에 비해 1997~2005년 기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두 기간 모두에서 25~29세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을 주도적으로 감소시켰는데, 그러한 기여도가 1992~1997년 기간에 비해 1997~2005년 기간에 더욱 커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05~2013년 기간에는 15~19세의 출산율 감소폭은 크지만 30대 이상의 출산율 증가가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다소나마 증가하였다. 특히, 30~34세 출산율과 더불어 35~39세 출산율도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증가하여 20대의 출산율 감소폭을 상쇄하고도 남아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30~44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20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부적 기여도가 최근에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구성하고 있는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두 요소(component) 즉, 만혼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유배우율과 결혼 후 출산행태 변화의 영향을 받은 유배우출산율로 분해하여 각 요소의 기여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출산율 변화의 요인분해

합계출산율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연령별 출산율은 그 개념 상 미혼과 기혼 여성인구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즉,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가임기 여성인구의 결혼력과 기 결혼한 유배우 여성인구의 출산력이 결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별 출산율은 혼인력 지표와 출산력 지표로 분해(decomposition)가 가능하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sfr_i &= \frac{b_i}{asfp_i} \\
 &= \frac{b_i}{asfp_i} \times \frac{asmfp_i}{asmfp_i} \\
 &= \frac{b_i}{asmfp_i} \times \frac{asmfp_i}{asfp_i} \\
 &= asmfr_i \times asmr_i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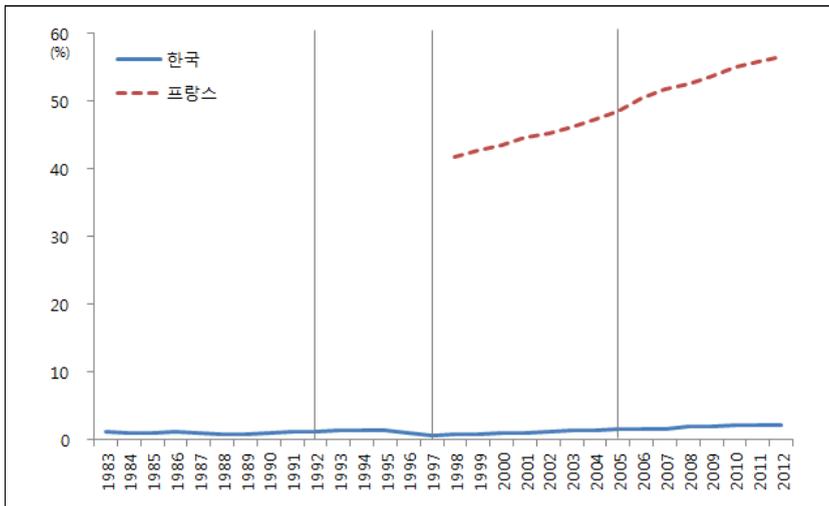
(여기에서 asfr은 연령별 출산율, b는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asfp는 연령별 전체 여성수, asmfp는 연령별 유배우 여성수, asmfr은 유배우출산율, asmr은 유배우율, i는 연령)

이러한 수식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대해 만혼화와 기혼여성의 출산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두 요소 즉, 유배우율(만혼화 관련 측정 지표)과 유배우 출산율(기혼여성의 출산력 관련 측정 지표)을 차례대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기간별로 실시하여 각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1. 유배우율

한국과 같이 혼외출산 비율이 아주 낮은 국가에서는 유배우율이 합계 출산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결혼 후에 출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수준이나 결혼 시기 등은 실제 출산가능 인구의 규모와 실제 출산시기(혹은 실제 가임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의 혼외출산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 한국과 프랑스의 혼외출산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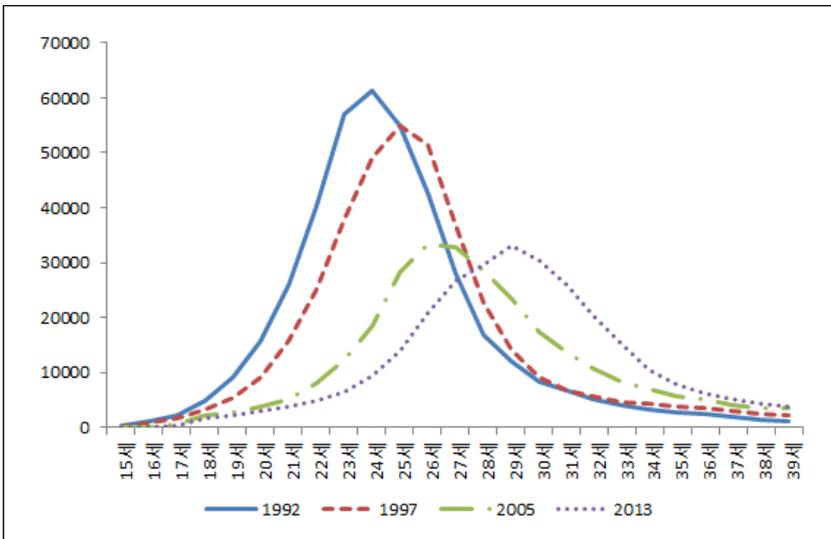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 통계청 KOSIS, 프랑스는 EUROSTAT

우선 유배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혼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가임기 여성의 혼인건수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2년에 가장 많이

결혼하는 연령은 24세이며, 전후 연령의 분포는 다소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결혼한 연령은 1997년에 25세, 2005년에 27세 그리고 2013년에는 29세이며, 이들 연령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적으로 결혼건수 분포의 대칭점인 연령이 고연령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다가 중심이 되는 연령층과 인근 연령층들 간에 빈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혼인연령이 전반적으로 고연령층으로 전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3-3]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혼인건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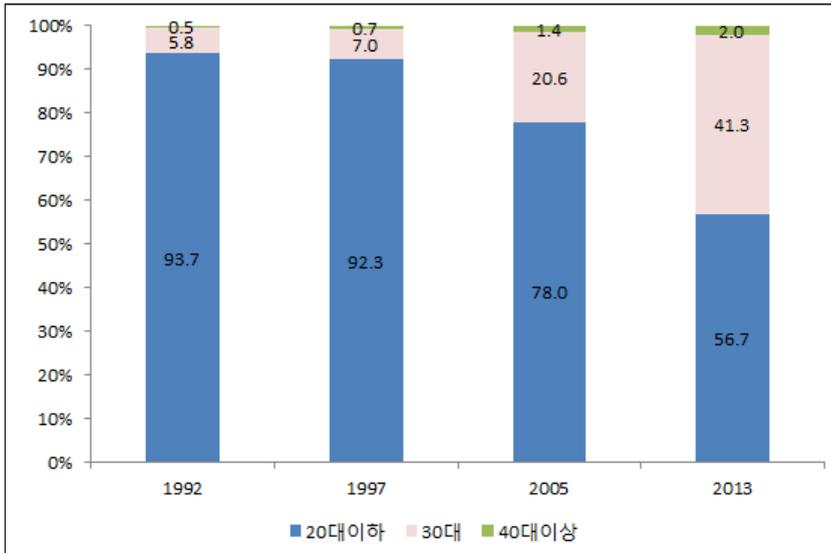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실로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비율을 20대 이하, 30대 및 40대로 구분해 보면, 20대 이하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대신 30대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이하의 비율은 1992년 93.7%에

6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서 2013년 56.7%로 감소하고, 30대의 비율은 동 기간에 5.8%에서 41.3%로 증가하였다. 한편, 40대의 비율도 1992년 0.5%에서 2013년 2.0%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그림 3-4] 가임기 여성의 혼인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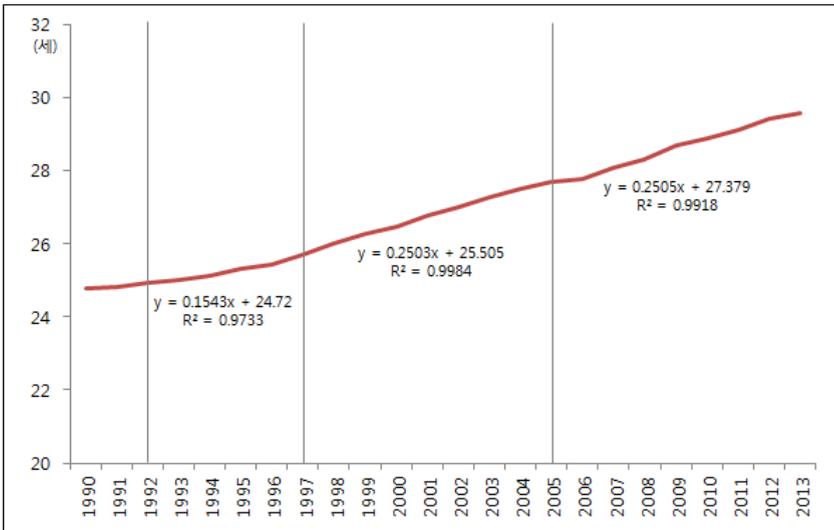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이러한 여성의 결혼연령 분포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 초혼연령을 이용하여 추세선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2년 24.9세에서 1997년 25.7세, 2005년 27.7세, 2013년 29.6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3~2003년간 2.26세 그리고 2003~2013년간 2.32세가 증가하여 매 10년마다 약 2.3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b)은 1992~1997년 기간에 0.1543, 1997~2005년 기간에 0.2503 그리고 2005~2013년 기간에 0.2505로 측정되었다. 1992~1997년 기간에 비해 최근의 기간에 여성의 초혼연령이 보다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초저출산현상에 진입하기 직전에 혼인연령 상승속도와 2005년 이래 현재까지의 상승속도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속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는 한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해준다.

[그림 3-5] 여성의 초혼연령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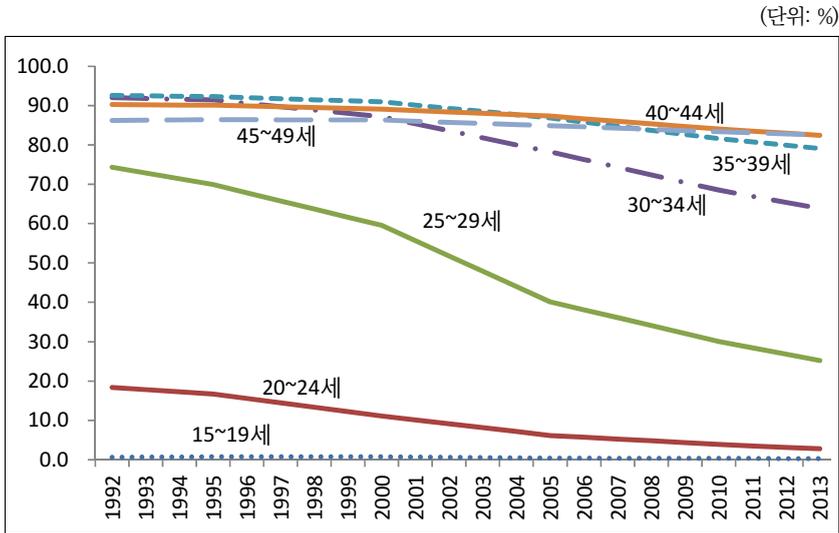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기간별로 유배우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 조사와 매년 생산되는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여성인구의 혼인상태(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이외 연도의 유배우율은 2010년 이전의 경우 내삽법(interpolation) 그리고 2010년 이후의 경우 외삽법(extrapolation)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산정 결과, 연령별 유배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유배우율은 1992년에 18.3%로 이미 낮아진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2.8%에 불과하였다. 25~29세 유배우율은 1992년 74.3%에서 2013년 25.2%로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유배우율도 1992년 92.0%에서 2013년 63.8%으로 25~29세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 유배우율은 아직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나 1992년 92.6%에서 2013년에는 79.1%로 80%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45~49세 유배우율은 1990년대 초에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사별 비율이 평균수명 증가로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6]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변동 추이



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사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2010년.

기간별로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1992년 수준 대비 비율(1992=100)과 증감률을 산정하였다. 유배우율은 20~24세

에서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2013년 20~24세 유배우율은 1992년 해당 연령층 유배우율의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25~29세 유배우율이 1992년 수준 대비 34%, 15~19세 유배우율의 경우 4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속도는 다소 완만하지만 2013년 30~34세 유배우율이 1992년 수준 대비 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9세 유배우율은 1992년 수준에 비해 90% 미만으로 낮아졌다. 40세 이상 유배우율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생애비혼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3-4〉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단위: %)

	연령층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유배우율								
1992	0.6	18.3	74.3	92.0	92.6	90.2	86.2	60.7
1997	0.8	14.5	65.8	89.7	91.7	89.7	86.4	61.5
2005	0.4	6.2	40.1	78.2	86.8	87.3	84.9	58.7
2013	0.3	2.8	25.2	63.8	79.1	82.4	82.6	52.4
1992=100								
199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7	121	79	88	98	99	99	100	101
2005	63	34	54	85	94	97	98	97
2013	47	15	34	69	85	91	96	86
증감률								
1992~1997	21.0	-21.2	-11.5	-2.5	-0.9	-0.6	0.2	1.3
1997~2005	-48.2	-57.3	-39.0	-12.8	-5.3	-2.6	-1.7	-4.6
2005~2013	-24.8	-55.0	-37.2	-18.4	-9.0	-5.6	-2.7	-10.6

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사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2010년.

기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폭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4세 유배우

율의 감소율은 모든 기간에 예외 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97~2005년에는 15~19세 유배우율 감소율이 그리고 2005~2013년에는 25~29세 유배우율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992~1997년 기간에 15~19세 유배우율과 45~49세 유배우율은 다소 증가하였는데, 전자는 이혼비율이 아직 낮아서 그리고 후자는 평균수명 상승으로 사별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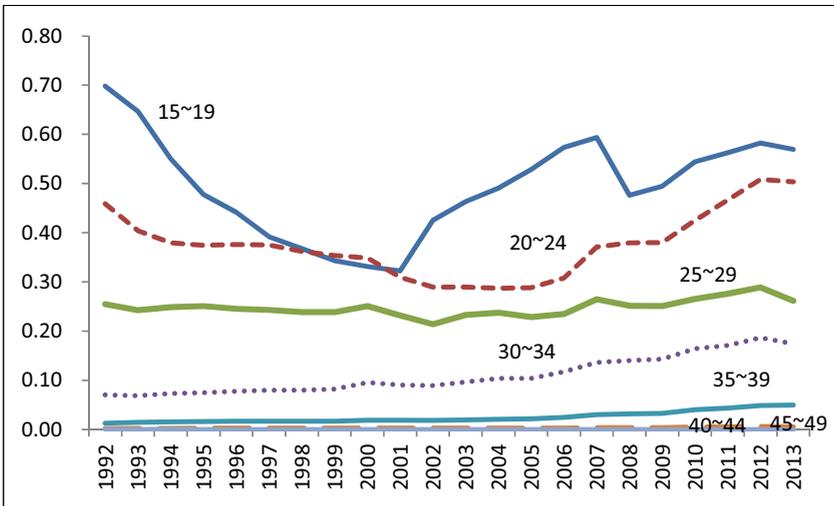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배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빠르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여성은 15~19세와 20~24세에서 거의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주된 결혼 및 출산 연령층인 25~29세 여성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4만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를 두고 있다. 이는 25~29세 여성으로부터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대에서의 유배우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혼 연기(만혼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30~34세 여성의 유배우율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20대에 미루었던 결혼이 30대 초반에도 이루어지 못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 30~34세 여성의 유배우율은 6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한 연령층에서의 결혼 연기가 다음 연령층에서도 이루어지 못하면서 점점 더 지연되는 효과가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은 평생비혼율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해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 연기 효과가 최근의 시기로 올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초저출산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들과 연관하여 분석할 것이다.

2. 유배우출산율

유배우출산율은 연간 출생아수를 유배우 여성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유배우 여성수는 앞서 산정한 연령별 유배우율을 해당 연령층의 주민등록 여성인구(7월 1일자)에 곱하여 추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유배우출산율은 기간에 따라 15~19세 혹은 20~24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15~19세 유배우출산율은 분모인 유배우여성수가 극히 적어 불규칙하게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체로 2001년을 저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20~24세 유배우출산율도 2004년을 저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5~29세 유배우출산율은 다소의 불규칙성을 제외하면 2002년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다. 30세 이상 유배우출산율은 1992~2013년 기간에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울기는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그림 3-7]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주: 연간 출생아수를 본 연구에서 추정한 유배우 여성수(인구주택총조사 및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각년도별 유배우율을 각년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에 곱한 값)로 나누어 유배우출산율 산출

기간별로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1992년 수준 대비 비율(1992=100)과 증감률을 산정하였다. 유배우출산율은 연령별로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20~24세와 25~29세 유배우출산율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3년에는 1992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4세 유배우출산율은 1992년 대비 2005년 수준이 6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수준은 1992년 대비 110%로 높게 나타났다. 25~29세 유배우출산율도 1992년 대비 2005년 수준이 90%였으나 2013년 수준은 1992년 대비 103%로 높게 나타났다. 30~44세 사이 연령집단의 유배우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2년 대비 2013년 유배우출산율의 비율을 보면 30~34세의 경우 2.5배, 35~39세의 경우 3.8배, 40~44세의 경우 3.0배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15~19세 유배우출산율은 최근에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99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45~49세 유배우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져 2013년 수준이 1992년 수준의 44%에 불과하였다.

기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대 유배우출산율은 1992~1997년 기간과 1997~2005년 기간에 감소하였으나 2005~2013년 기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3년 기간에 증가율은 25~29세에 비해 20~24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44세 연령층에서 유배우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30~34세와 35~39세 증가율은 1997~2005년 기간에 약 30%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05~2013년 기간에는 35~39세 증가율이 30~3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5~19세 유배출산율은 1997~2005년 기간과 2005~2013년 기간에 증가세로 나타났으나 2005~2013년 기간에는 낮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40~44세 유배우출산율은 전 기간에 증

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5~2013년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임기 중 가장 고연령층인 45~49세는 1997~2005년 아주 약한 증가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표 3-5〉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단위: 유배우여성 1,000명당 명, %)

	연령층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유배우출산율							
1992	697.9	458.7	254.7	70.2	13.0	1.9	0.3
1997	391.6	375.0	242.8	79.7	16.8	2.6	0.2
2005	528.7	288.2	228.6	104.2	21.5	2.7	0.2
2013	569.5	503.5	261.5	174.5	50.0	5.8	0.1
1992=100							
199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7	56	82	95	114	129	133	85
2005	76	63	90	148	166	143	86
2013	82	110	103	249	384	302	44
증감률							
1992~1997	-43.9	-18.2	-4.6	13.5	29.1	33.1	-15.2
1997~2005	35.0	-23.2	-5.9	30.7	28.3	7.2	1.8
2005~2013	7.7	74.7	14.4	67.5	132.0	111.8	-48.6

주: 연간 출생아수를 본 연구에서 추정한 유배우 여성수(인구주택총조사 및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각 연도별 유배우율을 각 연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에 곱한 값)로 나누어 유배우출산율 산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두 시기인 1992~1997년 기간과 1997~2005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 유배우출산율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즉, 20대 유배우출산율은 감소하고 30대 유배우출산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2~1997년은 15~19세와 유배우출산율의 하락이 커 30~45세의 유배우출산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배우출산수준이 감소한 반면 1997~2005년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유배우출산율이 증가하여 전

반적으로 유배우출산수준이 증가하였다. 2005~2013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 유배우출산율이 모두 증가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기간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2013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증가폭은 미약하여 아직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20대에서 유배우출산율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는 유배우율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20대의 유배우출산율이 199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주된 출산 연령층인 25~29세의 유배우출산율은 유배우여성 1명당 0.26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합계출산율과 유배우합계출산율 간의 비교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합성하면 유배우합계출산율을 구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코호트가 가임기(15~49세)를 거치면서 낳은 총 자녀수이다. 다만, 가임기의 전 기간을 관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특정 연도에 서로 다른 여러 코호트들이 경험한 출산율을 한 코호트가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연령별로 유배우 여성만을 산식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각 연령층에 해당하는 코호트 전체로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합성한 유배우합계출산율은 한 코호트가 가임기를 거치면서 낳은 자녀수라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가임기간(15~49세) 중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의 값(유배우율)을 다른 연령층에 적용하여 개념적으로 가임기에 있는 전 연령에서 동일한 코호

트(유배우코호트)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을 최고치 유배우율로 보정하여 연령별 보정유배우출산율을 구하고, 이를 합성하여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asmfr_i &= \frac{b_i}{asmfp_i} \\ &= \frac{b_i}{asfp_i \times asmr_i} \\ \widehat{asmfr}_i &= \frac{b_i}{asfp_i \times \max(asmr_i)} \\ \widehat{mtfr} &= \sum_{i=15}^{49} \widehat{asmfr}_i\end{aligned}$$

(여기에서 $asmfr$ 은 유배우출산율, b 는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asmfp$ 는 연령별 유배우 여성수, $asfp$ 는 연령별 여성수, $asmr$ 은 유배우율, \widehat{asmfr} 은 보정유배우출산율, $\max(asmr)$ 은 유배우율 최고치, \widehat{mtfr} 은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i 는 연령)

우선 보정하기 이전의 유배우합계출산율은 저연령층에서 아주 높은 영향으로 비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유배우합계출산율은 1992년 7.48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1년 4.88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이후 유배우합계출산율은 다소의 불규칙성은 존재하나 2012년 8.10까지 높아졌다. 2013년에는 7.82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은 1992년 1.91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1.22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이후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은 다소의 불규칙성이 존재하나 2012년 1.57까지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한 1.44로 추정되었다. 유배우합계출산율을 보정 전후로 비교해보

7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면, 서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유배우합계출산율은 보정 전 수준이 보정 후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의 경우 동일한 유배우율을 적용하여 코호트를 동질화시켰기 때문이다. 보정 전 유배우합계출산율은 2001년을 최저점으로 그리고 보정 후 유배우합계출산율은 2005년을 최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보정 전 유배우출산율이 저연령층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보정 후 유배우출산율은 최고치 유배우율의 영향을 받아 저연령층에서 완만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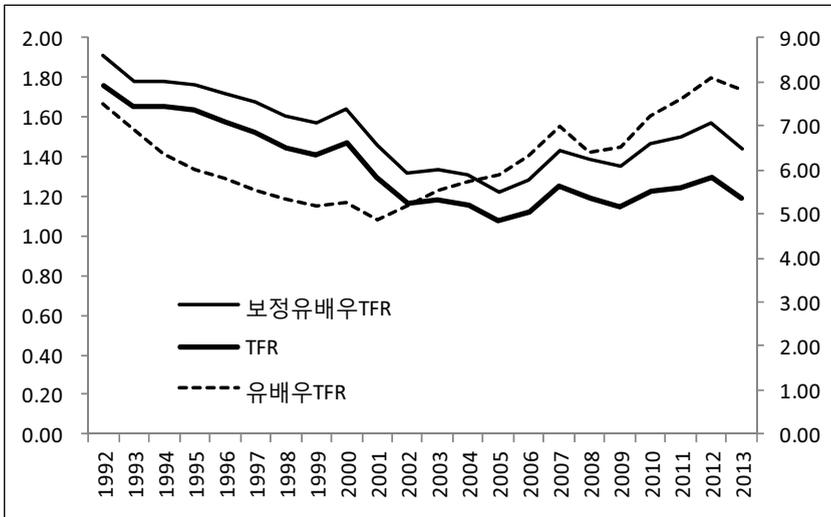
〈표 3-6〉 합계출산율, 유배우합계출산율 및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단위: 명)

	유배우 합계출산율(A)	보정 유배우 합계출산율(B)	합계출산율(C)	차이(B-C)
1992	7.48	1.91	1.76	0.15
1993	6.90	1.78	1.65	0.13
1994	6.35	1.78	1.66	0.12
1995	5.99	1.76	1.63	0.13
1996	5.80	1.72	1.57	0.14
1997	5.54	1.67	1.52	0.15
1998	5.34	1.61	1.45	0.16
1999	5.19	1.57	1.41	0.16
2000	5.25	1.64	1.47	0.17
2001	4.88	1.45	1.30	0.16
2002	5.20	1.31	1.17	0.15
2003	5.52	1.34	1.18	0.16
2004	5.72	1.31	1.15	0.16
2005	5.87	1.22	1.08	0.14
2006	6.30	1.28	1.12	0.16
2007	7.00	1.43	1.25	0.18
2008	6.41	1.38	1.19	0.19
2009	6.53	1.36	1.15	0.21
2010	7.22	1.47	1.23	0.24
2011	7.63	1.50	1.24	0.26
2012	8.10	1.57	1.30	0.27
2013	7.82	1.44	1.19	0.25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을 기혼과 미혼 여성 모두를 포함한 합계출산율과 비교해보면, 전 기간에서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고치의 유배우율을 모든 연령층에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차이는 연령별 유배우율(만혼화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실제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차이는 대체로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간 차이는 1992~1997년 기간에 0.15 이하였으나, 1998~2008년 기간에는 0.2 이하 그리고 2009~2013년 기간에는 0.2 이상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그 차이는 0.2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유배우율(특히 20~30대)이 최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른바 만혼화 현상이 최근에 올수록 더욱 강화(초혼연령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8] 합계출산율, 유배우합계출산율 및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비교



4. 인구학적 영향요인 분해

지금까지 초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인 즉, 만혼화를 측정하기 위한 유배우율과 기혼부인의 출산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유배우출산율을 추정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요인을 종합하여 각 요인이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기 구분별로 전체 합계출산율의 변화량, 유배우율 변화(각 시기구분에서 시작연도의 유배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 유배우출산율 변화(각 시기구분에서 시작연도의 유배우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두 요인의 합계출산율 변화량에 절대값(절대변화량)을 취하여 합한 후, 각 요인의 절대변화량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은 합계출산율 변화량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 크기이며, 각 요인의 영향 방향은 실제 변화량의 부호가 해당된다.

우선 1992~2013년 전체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57명이 감소했다. 유배우율 변화에 의해서는 1.10명이 감소했고, 유배우출산율 변화에 의해서는 0.73명이 증가했다. 각 요인의 영향력은 유배우율 60.2% 그리고 유배우출산율 39.8%이다. 즉, 이 기간에 유배우율이 유배우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유배우율의 영향방향은 부(-)적이고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방향은 정(+)적으로, 유배우율의 부적인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커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1992~2013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1992년 기준의 유배우율 혹은 유배우출산율 수준이 2013년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실시됐다. 즉, 각 요인의 영향력은 1992년 기준으로 2013년에의 변화정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단점은 1992년과 2013년 사이 중 특정 시기별로 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시기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동일한 방법의 분석을 기간별로 실시하였다.

1992~1997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24명이 감소하였다. 유배우율의 변화에 의해서는 합계출산율이 0.20명 그리고 유배우출산율의 변화에 의해서는 합계출산율이 0.07명 각각 감소하였다. 각 요인의 절대적 영향력은 유배우율 75.3% 그리고 유배우출산율 24.7%이다. 이 기간에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 영향방향이 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유배우율의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그만큼 만혼화가 합계출산율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05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44명이 감소하였다. 유배우율 변화에 의해서는 0.52명 감소한 반면, 유배우출산율 변화에 의해서는 0.03명이 오히려 증가했다. 각 요인의 절대적 영향력은 유배우율 94.9% 그리고 유배우출산율 5.1%로 측정된다. 이 기간에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보다 압도적으로 커,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5~2013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0.11명이 증가하였다. 유배우율 변화에 의해서는 0.52명이 감소했고, 유배우출산율 변화에 의해서는 0.03명이 증가했다. 절대적 영향력은 유배우율 36.0% 그리고 유배우출산율 64.0%이다. 이 기간에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

이다. 다만, 1997~2005년 기간에 초저출산현상 진입 시에 유배우율의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에 비해 아주 컸던 것과는 달리, 2005~2013년 기간에는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에 비해 다소 큰데 그침으로써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7〉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절대적(합계출산율)				절대적 영향력(%)		
	TFR 변화량	유배우율에 의한 변화량	유배우 출산율에 의한 변화량	상호작용 효과	계	유배우율 기여	유배우 출산율 기여
1992~1997	-0.24	-0.20	-0.07	0.03	100.0	75.3	24.7
1997~2005	-0.44	-0.52	0.03	0.05	100.0	94.9	5.1
2005~2013	0.11	-0.31	0.54	-0.13	100.0	36.0	64.0
1992~2013	-0.57	-1.10	0.73	-0.20	100.0	60.2	39.8

주: 상대적 기여도는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한 후, 각 요인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에 절대치를 취한 후 구성비를 구한 것임.

제4절 템포효과 분석

유배우율 감소 즉, 만혼화는 출산연기효과(템포효과)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혼을 늦게 하여 출산을 시작하는 만큼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와 모의 연령별 평균 출산연령을 이용하여 템포효과를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출산순위별로 다소 속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1992년 26.1세에서 2013년 30.7세로, 둘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동 기간 28.4세에서 32.6세로, 셋째

아 평균 출산연령은 30.9세에서 34.4세로, 그리고 넷째아 이상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에서 35.9세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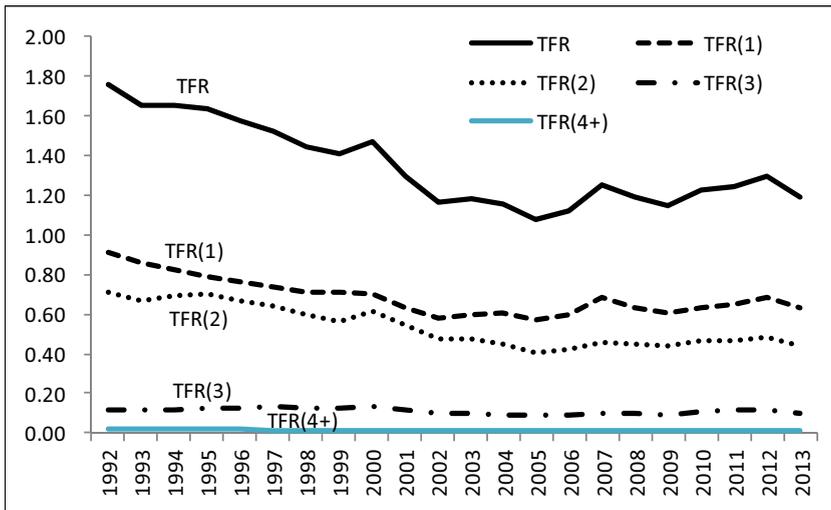
(단위: 세, 명)

	모의 평균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1992	27.40	26.10	28.40	30.90	33.70	1.76	0.91	0.71	0.11	0.02
1993	27.55	26.23	28.48	31.15	33.84	1.65	0.86	0.66	0.11	0.02
1994	27.78	26.40	28.65	31.35	34.02	1.66	0.82	0.69	0.12	0.02
1995	27.92	26.49	28.73	31.55	34.17	1.63	0.79	0.70	0.13	0.02
1996	28.09	26.65	28.89	31.67	34.28	1.57	0.76	0.67	0.13	0.02
1997	28.28	26.86	29.04	31.80	34.28	1.52	0.73	0.64	0.13	0.02
1998	28.48	27.11	29.23	31.91	34.23	1.45	0.71	0.59	0.13	0.01
1999	28.68	27.38	29.41	32.05	34.40	1.41	0.71	0.56	0.12	0.01
2000	29.02	27.68	29.67	32.23	34.51	1.47	0.70	0.62	0.14	0.01
2001	29.26	27.97	29.88	32.47	34.76	1.30	0.63	0.54	0.11	0.01
2002	29.49	28.29	30.19	32.68	34.90	1.17	0.58	0.47	0.10	0.01
2003	29.71	28.57	30.44	32.87	34.87	1.18	0.60	0.47	0.10	0.01
2004	29.98	28.83	30.77	33.07	35.24	1.15	0.60	0.44	0.09	0.01
2005	30.22	29.08	31.03	33.30	35.34	1.08	0.57	0.41	0.09	0.01
2006	30.43	29.27	31.28	33.48	35.41	1.12	0.60	0.42	0.09	0.01
2007	30.58	29.42	31.50	33.62	35.54	1.25	0.68	0.46	0.10	0.01
2008	30.79	29.60	31.69	33.80	35.66	1.19	0.63	0.45	0.10	0.01
2009	30.97	29.85	31.80	33.90	35.73	1.15	0.61	0.44	0.09	0.01
2010	31.26	30.10	32.01	34.04	35.75	1.23	0.63	0.47	0.11	0.01
2011	31.44	30.25	32.23	34.09	35.94	1.24	0.65	0.46	0.11	0.02
2012	31.62	30.50	32.40	34.17	35.88	1.30	0.69	0.48	0.11	0.02
2013	31.84	30.73	32.62	34.36	35.93	1.19	0.63	0.44	0.10	0.01

주: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본 연구에서 산정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출산순위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해당 연령층의 여성수로 나눈 후 이를 합하여 산정하였다. 출산순위별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여성 수는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3-9]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주: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본 연구에서 산정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이렇게 산정한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모든 출산순위에서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최저점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 다소 높아진 상태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물론, 출산순위가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아 합계출산율은 1992년 0.91에서 2005년 0.57까지 감소한 후 최근에는 0.6대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둘째아 합계출산율은 1992년 0.71에서 2005년 0.41까지 감소한 후 최근에는 0.45~0.48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셋째아 합계출산율은 1992년 0.11에서 2005년 0.09까지 감소한 후 최근에는 1.0~1.1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넷째아 이상 합계출산율은 0.01~0.02 수준으로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템포효과는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을 일정기간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로 나누어 산정한다(Bongaarts and Feeney, 1998). 구체적인 산정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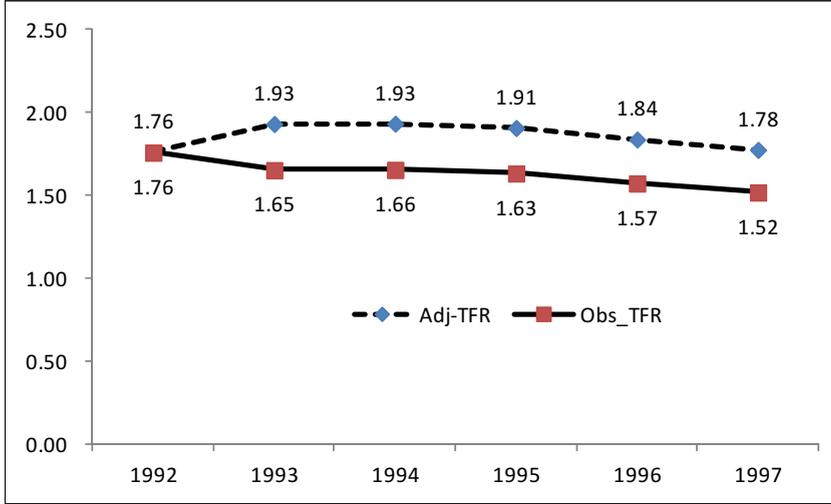
$$TFR'_i = TFR_i \times (1 - r_i)$$

$$TFR' = \sum_{i=15}^{49} TFR'_i$$

(여기에서 TFR'는 조정합계출산율, r은 모의 출산연령 평균 변화, i는 모의 연령)

템포효과는 기간별로 그리고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1992~1997년 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를 고려할 경우 조정합계출산율은 모든 연도에서 실측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2년 당시 모의 출산연령이 1997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실측된 합계출산율보다 대체적으로 0.26~0.28 정도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출산 연기가 출산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템포효과는 최근에 올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 올수록 출산연령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초저출산현상에 진입하기 이전으로 템포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도별로 다소 불규칙성은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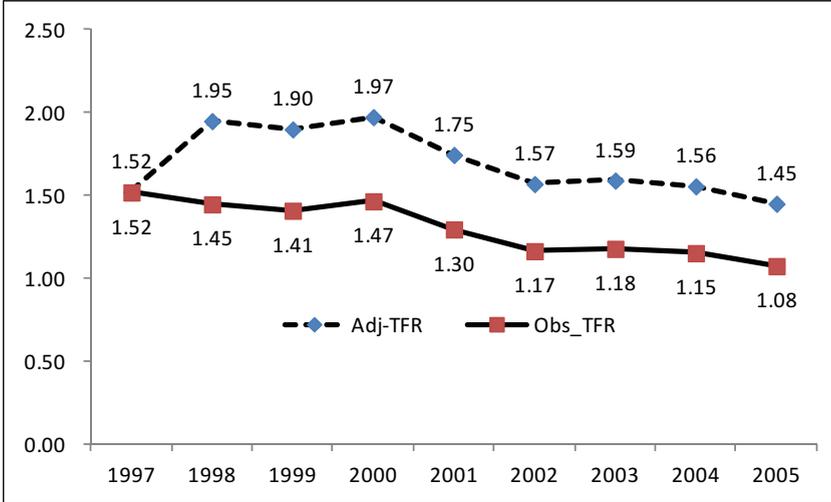
[그림 3-10] 1992~1997년 간 템포효과



주: Adj-TFR은 조정합계출산율이며 Obs_TFR은 실측합계출산율임.
 자료: Adj-TFR은 연구진이 계산한 것이며, Obs-TFR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1997~2005년 간 모의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도 조정 합계출산율은 모든 연도에서 실측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 당시 모의 출산연령이 2005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대체적으로 0.38~0.51 정도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출산 연기가 출산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템포효과는 2000년에 가장 크고 2005년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산연령이 2000년에 빠르게 높아졌으나, 이후에 그 폭이 점진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5년에 템포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당시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으로 낮아진 데에는 출산 연기 효과도 있겠지만 출산력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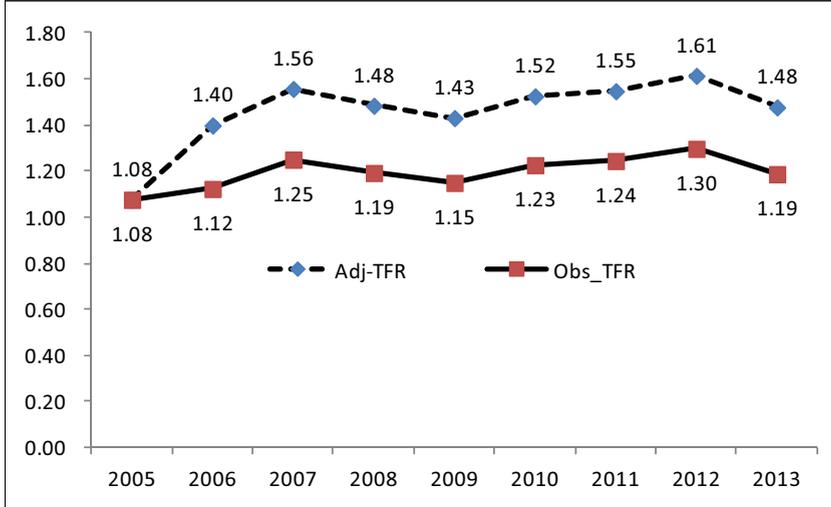
[그림 3-11] 1997~2005년 간 템포효과



주: Adj-TFR은 조정합계출산율이며 Obs-TFR은 실측합계출산율임.
 자료: Adj-TFR은 연구진이 계산한 것이며, Obs-TFR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2005~2013년 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도 조정 합계출산율은 모든 연도에서 실측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당시 모의 출산연령이 2013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대체적으로 0.28~0.32 정도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출산 연기가 출산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템포효과는 2012년에 가장 크고 2006년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산연령이 2000년에 빠르게 높아졌으나, 이후에 그 폭이 점진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템포효과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출산 연기 효과가 다소 안정되어 합계출산율도 2005년 최저점에 도달한 후 다소 일정한 수준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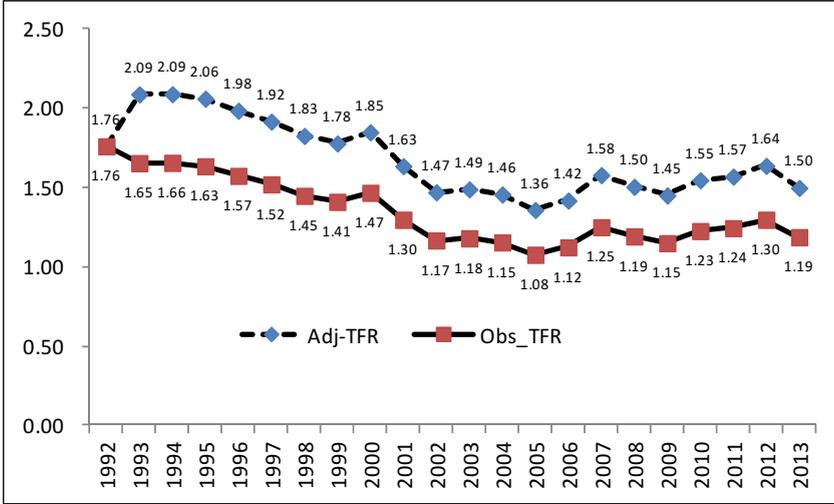
[그림 3-12] 2005~2013년 간 템포효과



주: Adj-TFR은 조정합계출산율이며 Obs-TFR은 실측합계출산율임.
 자료: Adj-TFR은 연구진이 계산한 것이며, Obs-TFR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전체 분석대상 기간(1992~2013년) 동안 모의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도 조정 합계출산율은 모든 연도에서 실측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2년 당시 모의 출산연령이 2013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대체적으로 0.28~0.43 정도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출산 연기가 출산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정 합계출산율과 실제 합계출산율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연도는 1993년으로 0.43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연도는 2005년으로 0.28로 나타났다.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에 도달하게 된 이유로는 출산 연기효과도 있었지만 출산력 자체가 감소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3] 1992~2013년 간 템포효과



주: Adj-TFR은 조정합계출산율이며 Obs_TFR은 실측합계출산율임.
 자료: Adj-TFR은 연구진이 계산한 것이며, Obs-TFR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KOSIS).

이상의 템포효과를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1997년 기간에 출산연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다음으로 2005~2013년 기간으로 나타난다. 1997~2005년 기간 출산연기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1992~1997년 기간에는 출산연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997~2005년 기간에는 출산연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최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05~2013년 기간에는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후에도 그 수준은 다소 낮으나 여전히 일정하게 출산연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탈피가 어렵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5절 인구학적 원인에 대한 종합논의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다각적으로 실시되었다. 인구학적 원인은 총체적인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영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특정 연령집단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연령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에는 25~29세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으로 인해 30대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25~29세 출산율 하락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2005년 이후에 30대 출산율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대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두 요인 즉, 만혼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유배우율과 결혼 후 출산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유배우출산율 중 어느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유배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5~29세 연령층에서 실제 출산이 가능한 유배우 여성의 비율(유배우율)이 1/4 수준에 불과하여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측정된다. 이는 20대의 출산율이 폭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결혼 연기 현상이 점차적으로 30세 이상 고연령층으로 확산되어 30~34세 여성의 유배우율도 이미 2/3 수준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결혼 연기의 연령 전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catch-up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30대 출산율의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20대의 출산율(유배우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져 30대 유배우출산율의 증가폭을 상회하여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 유배우출산율이 모두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에 20대와 30대 유배우출산율이 199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지 못한 이유로는 유배우율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출산할 수 있는 유배우여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간 영향 관계를 보면, 1992~1997년 기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75.3%)과 유배우출산율의 부적 영향력(24.7%) 모두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만혼화(유배우율)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7~2005년 기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94.9%)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5.1%)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 기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36.0%)을 상회한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64.0%)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에 비해 다소 커지는데 그침으로써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이래 최근까지 유배우율 변화 즉, 만혼화 정도가 출산연기효과(템포효과)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연기 효과는 1992~1997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97~2005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 기간에도 여전히 출산연기 효과가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어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25~29세 출산율의 감소세가 중지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증가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30대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만혼화 경향을 억제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유배우 여성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혼화는 유배우 여성의 비율(유배우율)을 줄여 출산연기 효과를 야기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억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연령층에서의 유배우출산율, 즉 결혼 후에 출산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20대와 30대의 유배우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1990년대 초 수준(당시 합계출산율은 약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향후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탈피하고, 더 나아가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20대(25~29세)와 30대 모두 유배우율을 높이고(만혼화 경향을 억제하고), 결혼 후에는 평균 2명 정도를 출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제4장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사회경제적 원인

제1절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산행태 차이

제2절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제3절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제4절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한 종합논의

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 사회경제적 원인

앞의 장에서 초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출산율 수준을 결정짓는 인구학적인 요소로서 결혼 여부 및 시기와 결혼 후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화하나, 그러한 의사결정에는 개인이나 부부 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연계하여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저출산의 인과구조론적 체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을 매개로 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방향은 우선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그 결과로서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를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구학적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어서 다변량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다시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 및 다변량분석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절에 제시하였다.

제1절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산행태 차이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변량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그 결과로서 평균 출생아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생진도비는 차 순위 출산을 이행하는 비율로 기혼여성의 출산력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나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서의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겠다.

출생진도비는 인구주택총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결혼을 한 여성 모두 무자녀에서 시작하여 첫째아를 출산한 비율(p1), 첫째아를 가진 기혼여성 중 둘째아를 출산한 비율(p2), 둘째아를 가진 기혼여성 중 셋째아를 출산한 비율(p3), 셋째아를 가진 기혼여성 중 넷째아를 출산한 비율(p4) 등을 산출하였다. 분석대상 연도는 2000년, 2005년 및 2010년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0년은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 직전 상황을, 2005년은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 후 최저 출산율수준이 나타났던 상황을 그리고 2010년은 초저출산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저 출산율 수준을 벗어난 상황을 각각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의 상태로 해당 집단의 여성들 모두가 반드시 그러한 상태를 가임기(15~49세) 전 과정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어느 정도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분석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1. 연령집단별 출산형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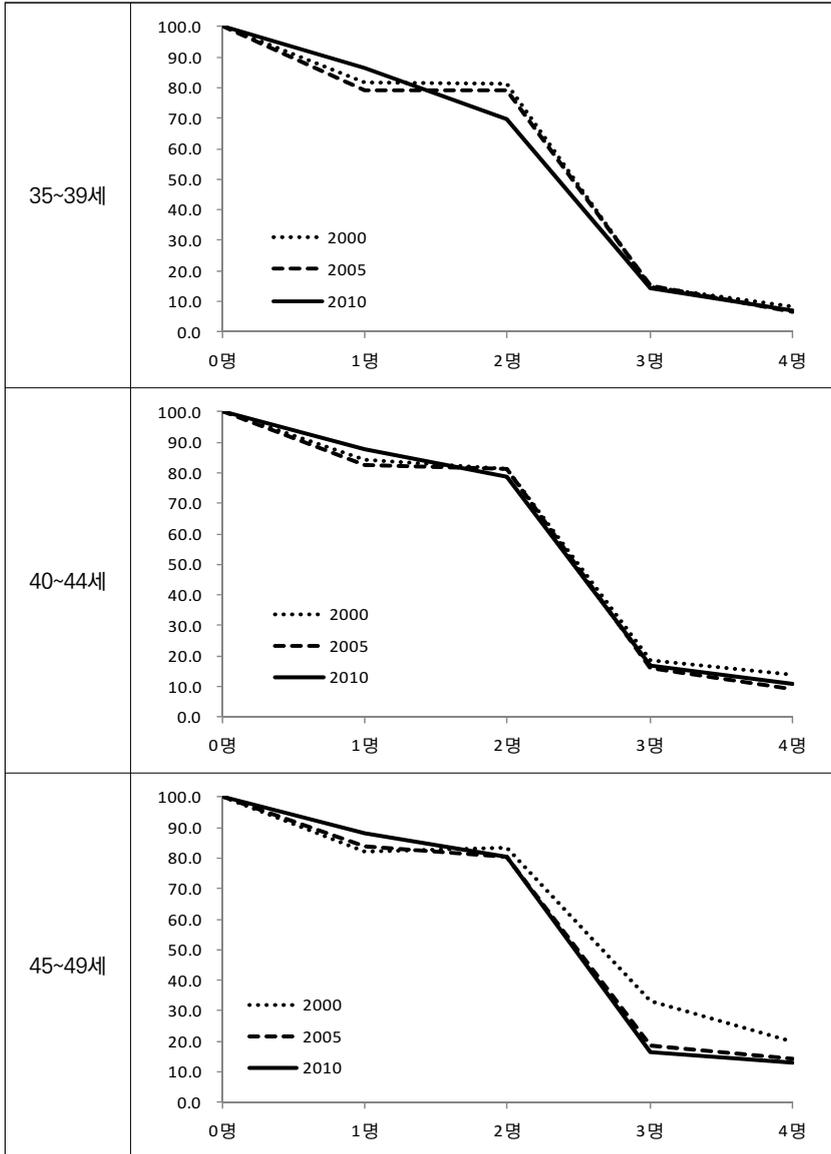
우선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생진도비를 산출하였다. 어느 정도 출산이 이루어진 35~39세 연령집단의 출생진도비는 2000년과 2005년에는 p1이 80% 수준으로 다소 낮고, p2가 p1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p3와 p4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반면, 2010년에는 p1이 거의 90% 수준으로 높은 대신 p2가 70% 수준으로 낮고, p3와 p4는 2000년 및 2005년과 마찬가지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어느 정도 출산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40~44세 연령집단의 출생진도비는 35~39세 연령집단에 비해 시기(2000, 2005, 2010)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p1은 다소 낮아지고, p2는 다소 높아져 2000년과 2005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p1은 2010년에서 그리고 p2는 2000년과 2005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3는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세 시간 간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p4는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2010년 및 2005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45~49세 연령집단의 출생진도비는 p1의 경우 40~44세 연령집단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p2~p4는 2005년과 2010년에 비해 2000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러한 차이는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이들 출생진도비는 2005년 수준이 2010년에 비해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9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그림 4-1] 가임기 기혼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생진도비 (35~39세, 40~44세, 45~49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p_1 이 2010년에 비해 2000년과 2005년에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연령이 진행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무자녀 비율이 2010년에 비해 2000년과 2005년에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데, 결과는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2010년에 무자녀 비율이 감소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둘째, 2010년에 p_2 가 연령이 진행되면서 2000년과 2005년의 수준에 근접해지고 있으나, 미세하나마 2010년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다. 만혼화로 인하여 저연령층에서 p_2 가 낮으나 연령이 진행되면서 일종의 catch-up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뒤늦은 catch-up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보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연령 진행에 따라, 그리고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2000년과 2005년 간 출생진도비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2000년 수준이 2005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과 2010년 간에도 나타나며, 다만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연령진행에 따른 catch-up정도가 낮아졌음을 제시해 준다. 즉, 2010년에 출생진도비는 200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던 초저출산현상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출생진도비의 차이로 인하여 평균 총출생아수는 2000년에 1.81명으로 2005년과 2010년에 비해 높고, 2005년과 2010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시기 간 가임기 여성의 연령구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표준화하였으나, 여전히 2000년 수준이 2005년과 2010년 수준에 비해 높고 오히려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표준화 후에 2005년 평균 총출생아수가 2010년에 비해 다소 많게 나타났다.

〈표 4-1〉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2000	2005	2010	연도간 차이	
				2005-2000	2010-2005
전체	1.81	1.74	1.74	-0.07	0.00
연령표준화	1.93	1.78	1.74	-0.16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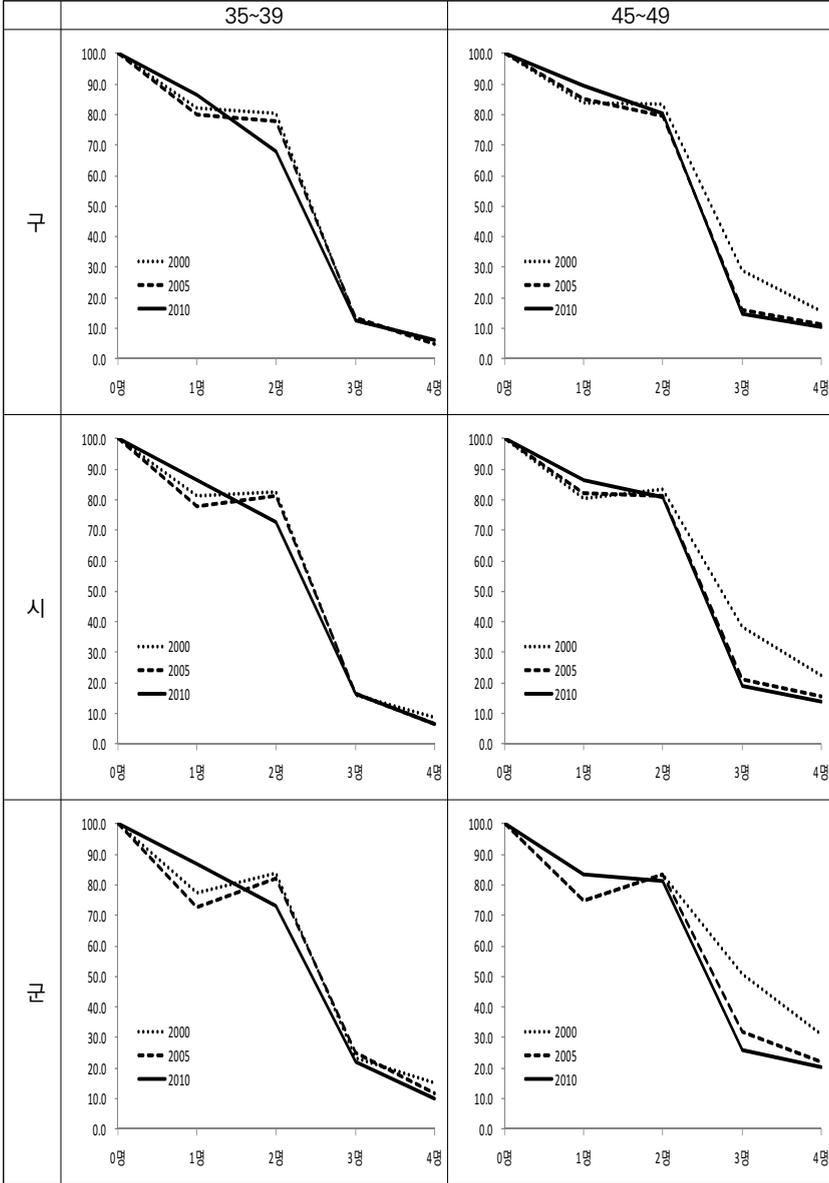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2. 지역별 출산형태 차이

지역별 출생진도비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35~39세 연령층에서 p1은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p4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45~49세 연령층에서 p1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는 과거의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p3과 p4는 더욱 낮아져 과거 수준과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p3과 p4는 2005년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45~49세 연령층에서 고출산순위 이행정도(출생진도비 p3과 p4)의 감소폭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인 구지역의 경우 과거부터 먼저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던 관계로 고출산순위 이행수준(출생진도비 p3과 p4)의 추가적인 감소폭은 그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았던 군지역의 고출산순위 이행수준(출생진도비 p3과 p4)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역의 경우에도 다소나마 고출산순위 이행수준(출생진도비 p3과 p4)이 추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고출산순위 이행정도(출생진도비 p3과 p4)는 점차 근접해지고 있다.

[그림 4-2] 가임기 기혼여성의 거주 지역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이와 같은 출생진도비 패턴의 결과로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등의 순으로 많으며, 지역 간 차이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군지역과 구지역 간의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2000년 0.31명이었으나 2005년 0.26명, 2010년 0.19명으로 나타났다. 시지역과 구지역간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도 2000년과 2005년 0.08에서 2010년 0.07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표준화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2〉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거주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평균 출생아수			차이(구지역 기준)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구	1.76	1.70	1.71	-	-	-
시	1.84	1.78	1.78	0.08	0.08	0.07
군	2.07	1.96	1.90	0.31	0.26	0.19
연령표준화						
구	1.86	1.73	1.70	-	-	-
시	2.00	1.83	1.79	0.14	0.10	0.09
군	2.21	2.00	1.91	0.35	0.27	0.2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하기 직전인 2000년만 해도 농촌지역에서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이 도시지역(구,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느 정도 출산율 하락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후인 2005년에는 농촌지역의 고출산경향이 약화되었고, 2010년에는 더욱 약해져 초저출산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점차 중소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도시(시지역)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여전히 대도시(구지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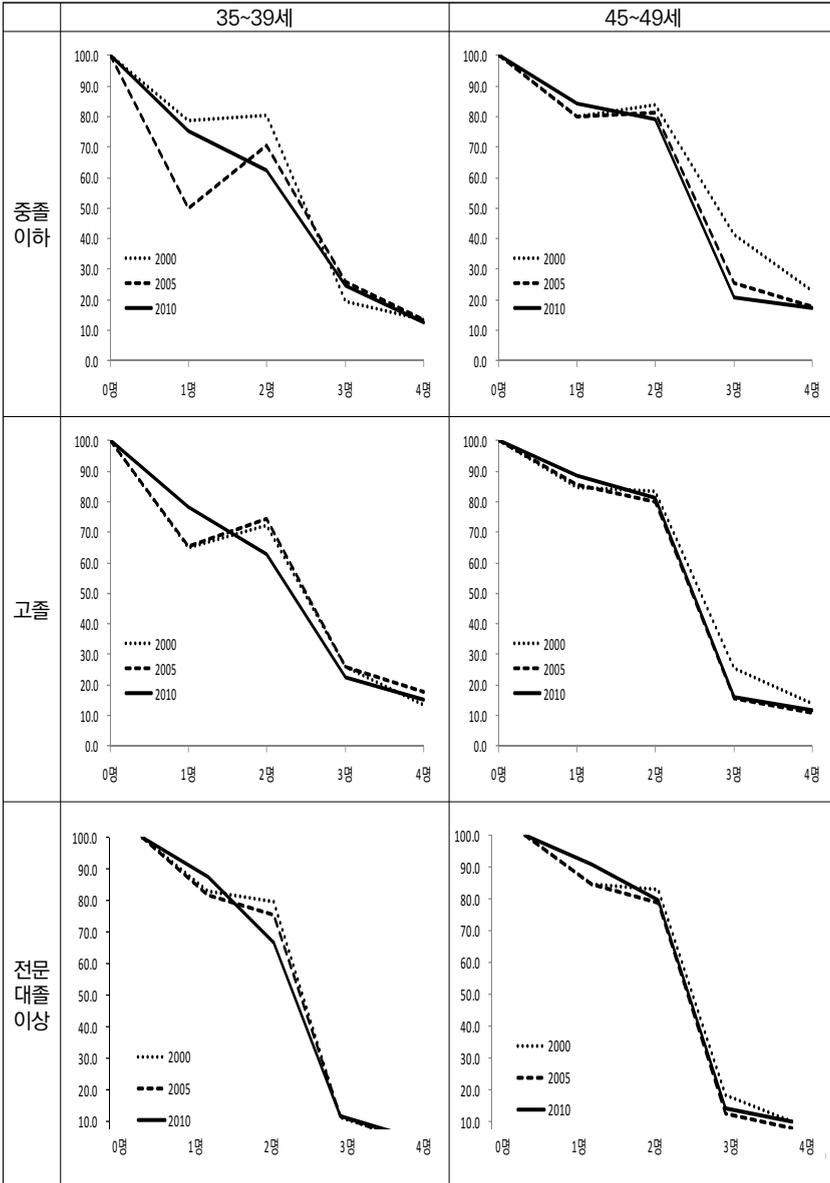
게 줄어들고 있다. 요컨대, 지역 간 출산수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이 초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교육정도별 출산행태 차이

교육정도별 출생진도비도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35~39세 연령층에서 p1은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p4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45~49세 연령층에서 p1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는 과거의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p3과 p4는 낮아져 과거 수준과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p3과 p4는 2005년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층의 경우 45~49세에서 출생진도비 p3과 p4는 이미 2000년에 아주 낮은 수준에 있었던 만큼 최근에 들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졸 학력층의 경우에는 45~49세에서 출생진도비 p3과 p4가 과거 수준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감소폭은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층의 경우 이미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정도가 낮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았던 고졸과 중졸 이하 학력층의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정도는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림 4-3] 가임기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이에 따라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많으나, 학력계층 간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졸이하 학력과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 간의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2000년에 0.67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0.50명 그리고 2010년에는 0.3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3〉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평균 출생아수			차이(전문대 졸 이상 기준)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중졸이하	2.19	2.02	1.92	0.67	0.50	0.33
고졸	1.76	1.80	1.84	0.24	0.27	0.24
전문대졸이상	1.52	1.53	1.59	-	-	-
연령표준화						
중졸이하	1.99	1.85	1.80	0.35	0.21	0.12
고졸	1.80	1.79	1.80	0.17	0.16	0.13
전문대졸이상	1.64	1.63	1.68	-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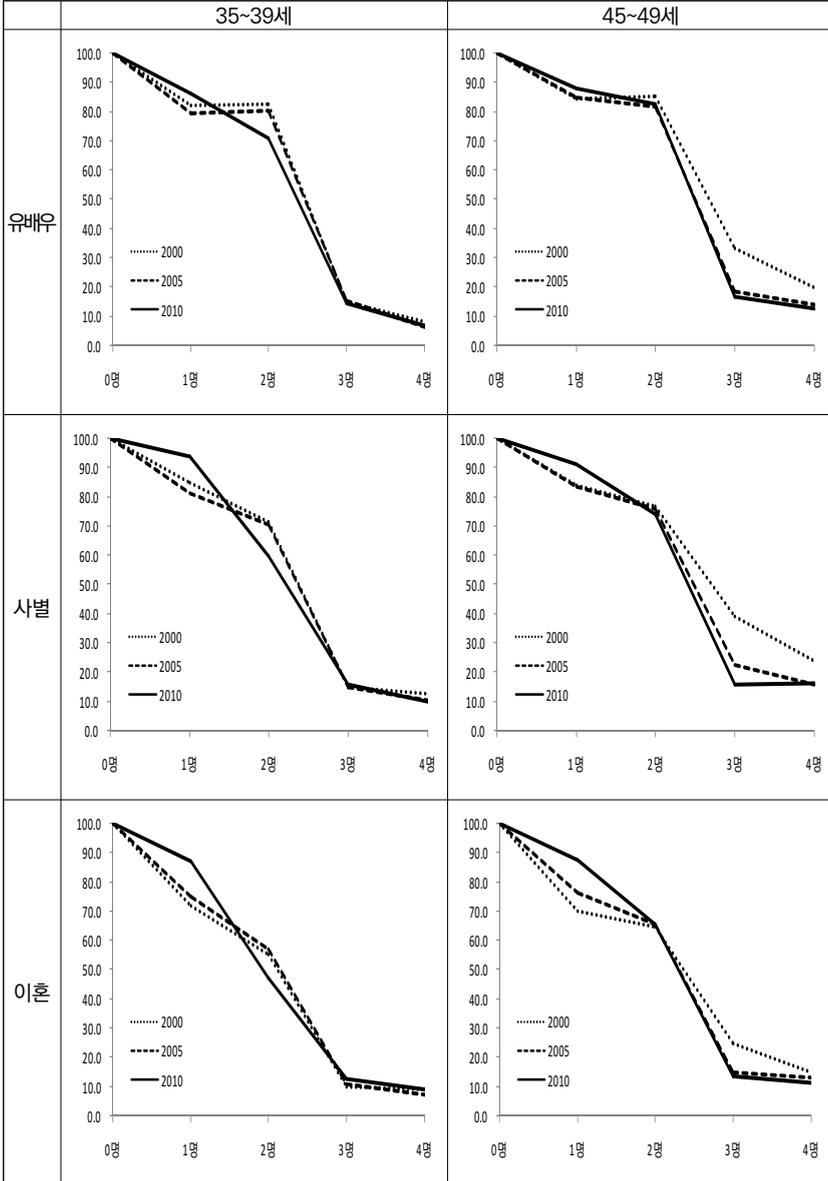
종합하면, 초저출산현상 진입 직전인 2000년에는 저학력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이 출산율 하락을 저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2005년과 2010년에는 저학력계층의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이 급격하게 낮아져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혼인상태별 출산행태 차이

혼인상태별 출생진도비도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35~39세 연령층에서는 p1의 경우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p4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45~49세 연령층에서는 p1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는 과거의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p3과 p4는 급격하게 낮아져 과거 수준과의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3과 p4는 2005년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출생진도비의 변화 패턴은 혼인상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에 사별여성이 사별 전에 고출산순위로 이행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으로 인하여 늦게 출산을 시작함으로써 사별 전에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이 그만큼 어려워 45~49세 연령층에서 p3과 p4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이혼은 주로 사별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혼여성이 과거나 현재 모두에서 이혼 전에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이 어려워 45~49세 연령층에서 p3과 p4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한편, 유배우여성도 45~49세 연령층에서 고출산순위로의 이행(p3과 p4)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출산순위로의 이행 정도가 줄어든 폭은 사별여성, 유배우여성, 이혼여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4-4] 가임기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이에 따라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아수는 사별여성에게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배우여성, 이혼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혼인상태(유배우, 사별, 이혼) 간 출산수준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후에 평균 출생아수는 유배우, 사별, 이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표준화 후 평균 출생아수의 혼인상태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혼인의 분절이 없는 유배우여성이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을 통해 함께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다른 혼인상태 대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평균 출생아수			차이(유배우 기준)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유배우	1.81	1.75	1.75	-	-	-
사별	2.14	1.92	1.87	0.33	0.17	0.12
이혼	1.51	1.54	1.62	-0.30	-0.21	-0.13
연령표준화						
유배우	1.95	1.80	1.76	-	-	-
사별	1.95	1.76	1.73	0.00	-0.04	-0.03
이혼	1.48	1.49	1.54	-0.47	-0.31	-0.2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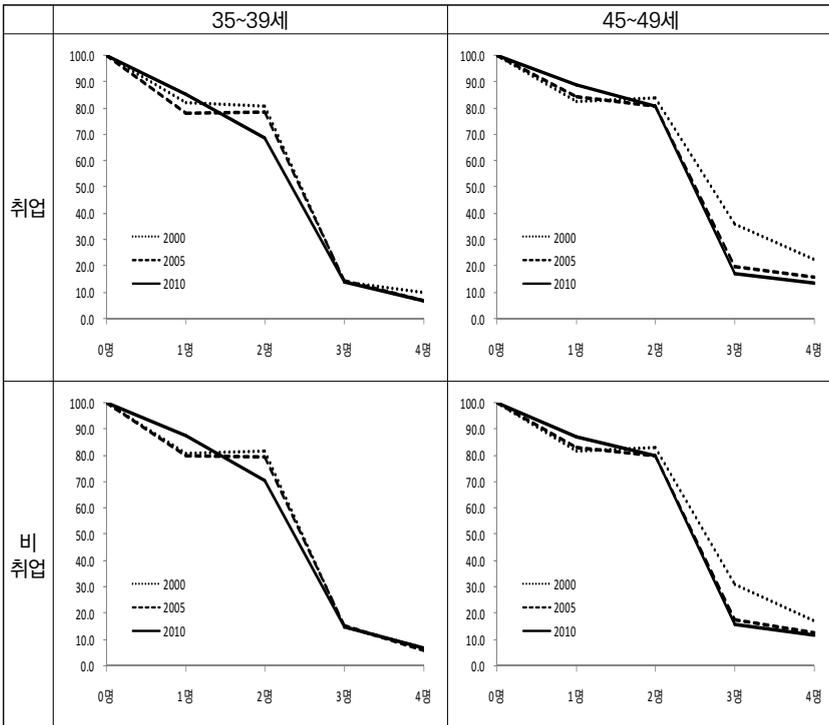
5. 취업 여부별 출산행태 차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출생진도비도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35~39세 연령층에서는 p1의 경우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p4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45~49세 연령층에서는 p1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는 과거의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p3과 p4는 급격하게 낮아져 과거 수준과의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p3과 p4는 2005년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아주 작았다.

45~49세 연령층에서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p3과 p4)의 감소폭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취업여성인 경우에도 농림어업직 등에 종사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에 올수록 전문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4-5] 가임기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취업 시 비취업 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연령구조를 표준화해 보면, 그 차이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비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 간 연령표준화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2000년에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많게 나타나나, 2005년과 2010년에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이는 2000년만 해도 기혼여성들이 취업 시에도 어느 정도 고출산 이행정도가 높아 출산율 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을지라도, 2005년과 2010년에는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취업여성의 고출산 이행 정도가 줄어들어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5〉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평균 출생아수			차이(비취업 기준)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취업	1.85	1.74	1.75	-0.07	0.00	0.02
비취업	1.78	1.74	1.73	-	-	-
연령표준화						
취업	1.93	1.74	1.71	0.01	-0.06	-0.05
비취업	1.92	1.80	1.76	-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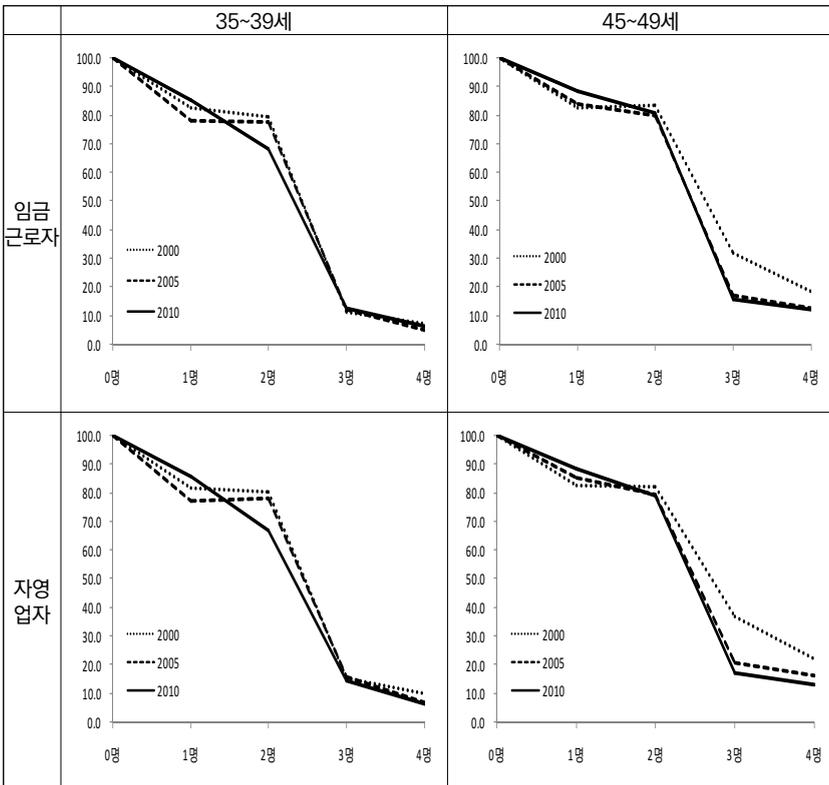
6. 종사상지위별 출산행태 차이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출생진도비도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35~39세 연령층에서는 p1의 경우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나 p2~p4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45~49세 연령층에서는 p1은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으나 p2는 과거의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p3과 p4는 급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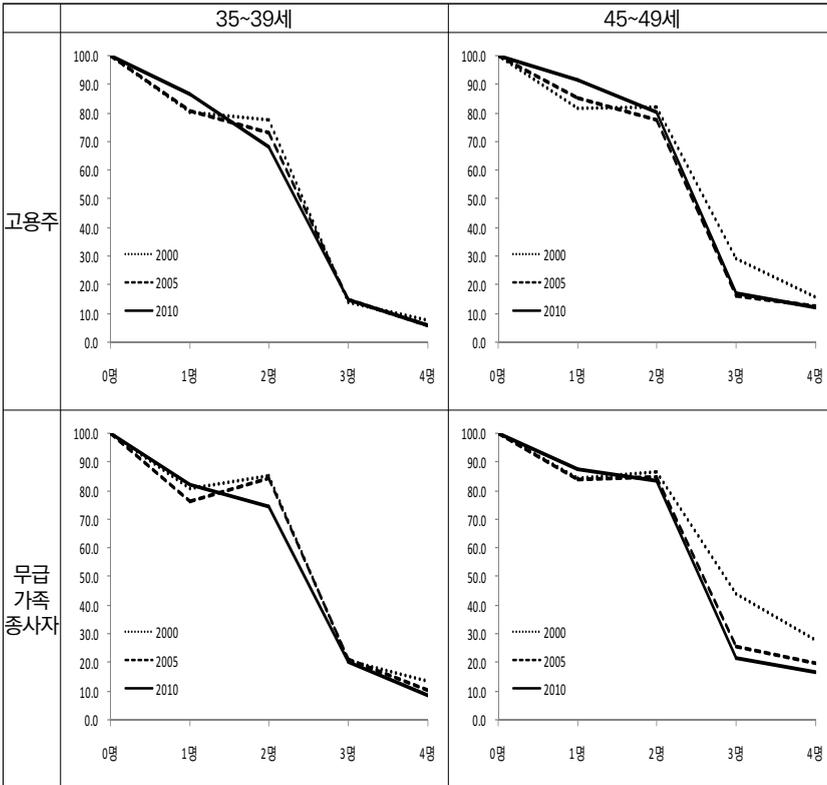
하게 낮아져 과거 수준과의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3과 p4는 2005년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아주 작았다.

45~49세 연령층에서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p3과 p4)의 감소폭은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고용주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그림 4-6] 가임기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그림 4-6] 계속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한편, 취업 중인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평균 출생아수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0년에는 고용주가 자영업자에 비해 평균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사상지위 간의 차이는 연령표준화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임금근로자와 다른 종사상지위 간 차이는 고용주만 다소 불규칙하게 변동할 뿐,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와의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2000년만 해도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고출산

순위로의 이행 수준이 전체 출산율 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2005년과 2010년에는 이들 종사상지위의 기혼여성들도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을 줄이면서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6〉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평균 출생아수			차이(임금근로자 기준)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임금근로자	1.70	1.63	1.69	-	-	-
자영업자	1.99	1.87	1.82	0.29	0.24	0.13
고용주	1.86	1.82	1.85	0.16	0.19	0.16
무급가족종사자	2.18	2.05	1.97	0.48	0.42	0.28
연령표준화						
임금근로자	1.88	1.73	1.72	-	-	-
자영업자	2.00	1.81	1.76	0.12	0.08	0.04
고용주	1.87	1.76	1.77	-0.01	0.03	0.05
무급가족종사자	2.21	1.99	1.90	0.33	0.26	0.1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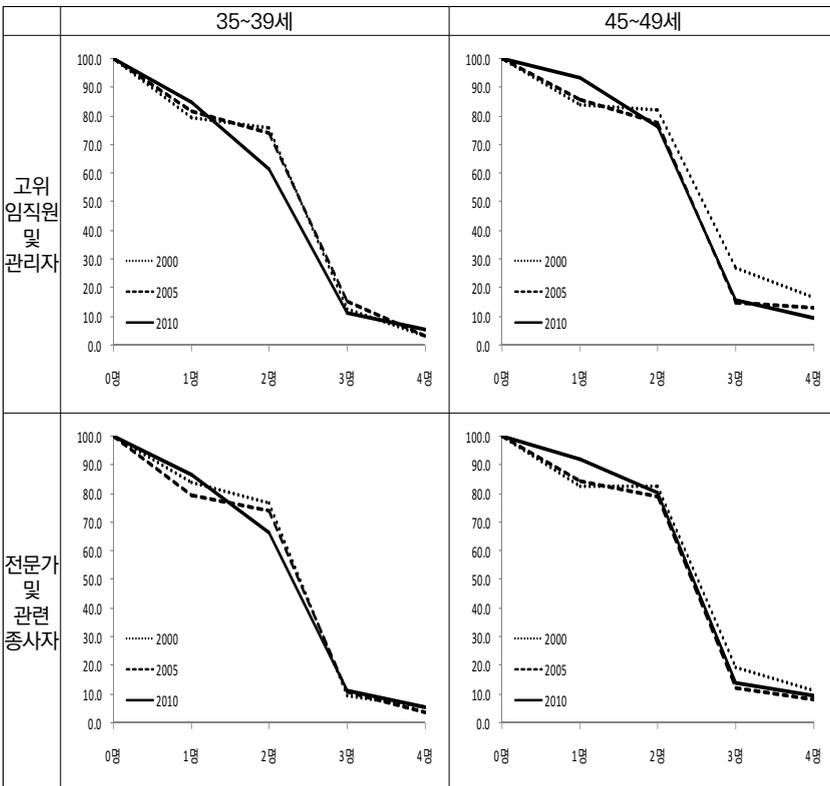
7. 직업별 출산행태 차이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직업별 출생진도비는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35~39세 연령층의 경우 p1이 직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p2~p4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산이 거의 완료된 45~49세 연령층에서도 p1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p2는 과거의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p3과 p4는 낮아져 과거 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p3과 p4는 2005년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 감소폭은 대체적으로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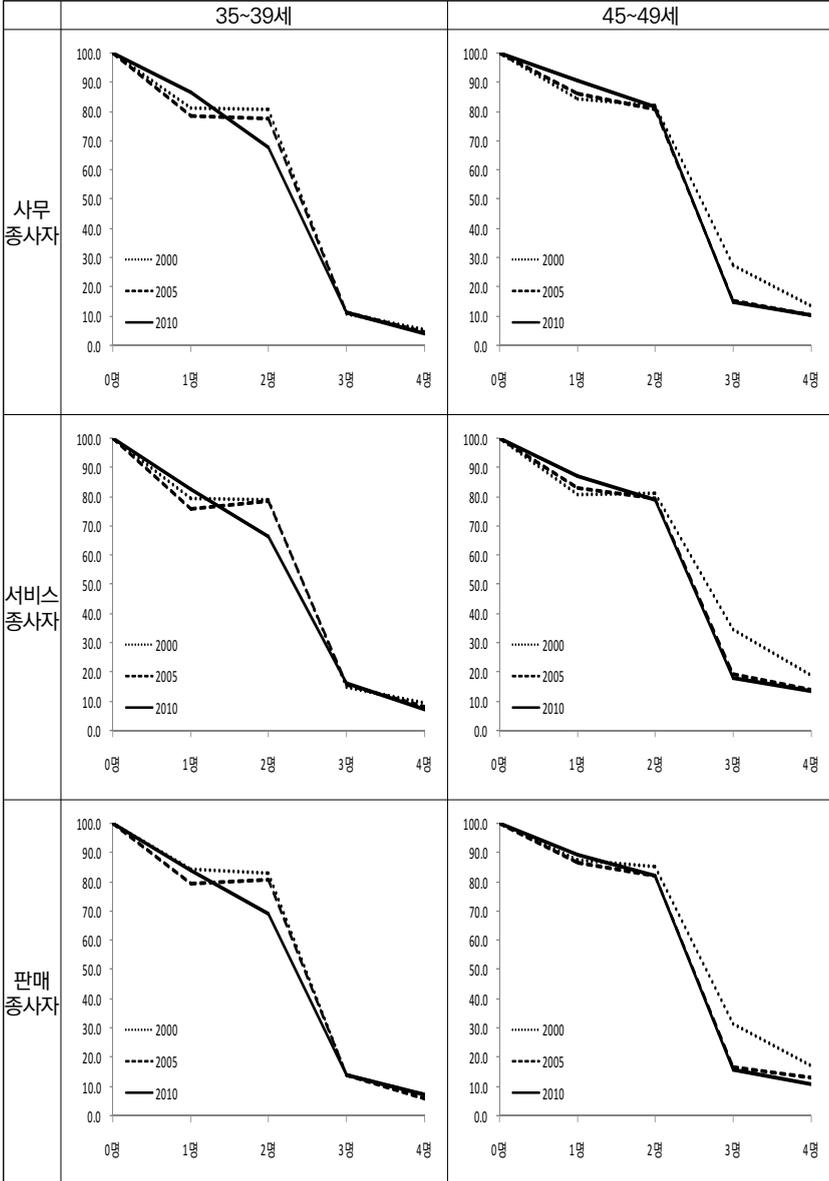
45~49세 연령층에서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p3과 p4)의 감소폭은 전문가에서 가장 작고, 농림어업직, 장치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2000년에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05년에 추가 감소하였으나 그 수준은 아주 적었고, 2010년

에는 미세하나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2000년만 해도 고출산순위로의 이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005년에 그 정도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직종들도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직종들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직, 판매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낮으나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p3과 p4)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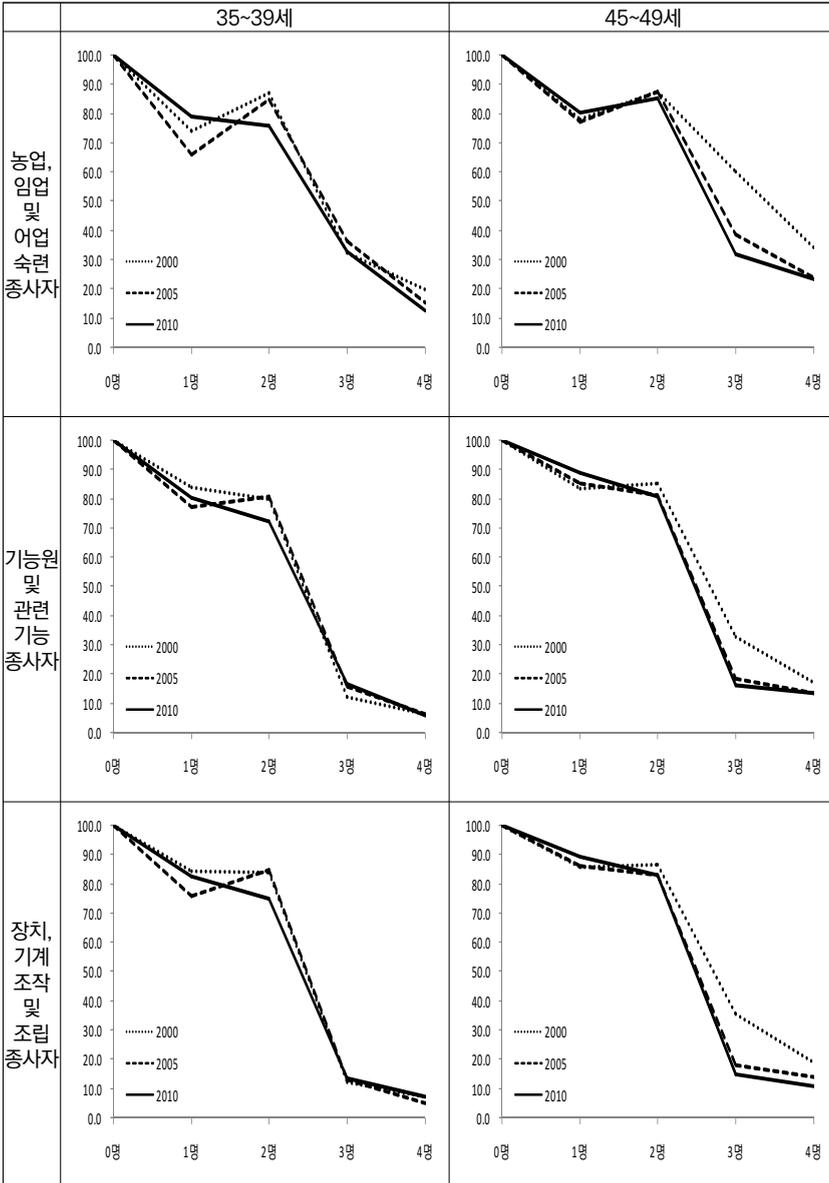
[그림 4-7] 가임기 기혼여성의 직업별 출생진도비 (35~39세, 45~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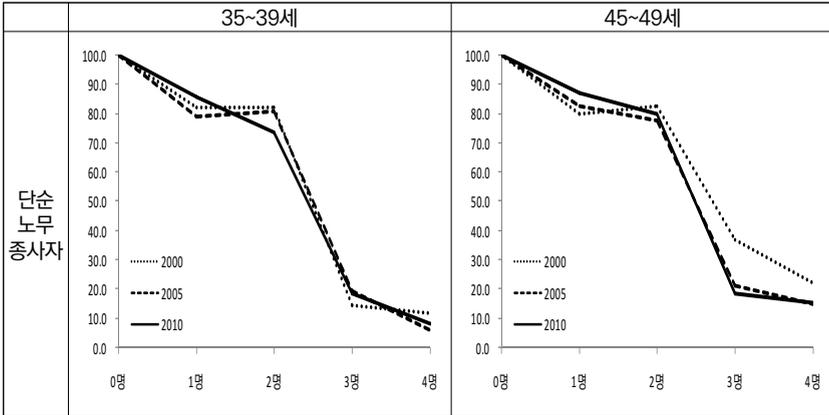
[그림 4-7] 계속



[그림 4-7] 계속



[그림 4-7] 계속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및 2010(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취업 중인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직업별로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연도 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등의 순으로 높고, 전문가, 사무종사자,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전문가를 기준으로 직종 간 차이를 보면, 고출산순위로의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의 경우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는 전문가에 비해 2000년에 평균적으로 1.14명을 더 낳았으나, 2005년에는 0.87명, 2010년에는 0.60명을 더 낳은데 그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단순노무종사자는 전문가에 비해 2000년에 평균 0.61명을 더 낳았으나 2005년에는 0.48명, 2010년에는 0.32명을 더 낳은데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직업 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연령표준화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0년만 해도 농

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등이 고출산순위로 보다 많이 이행을 하면서 출산을 하락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생하였다면, 2005년과 2010년에는 그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7〉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평균 출생아수			차이(전문가 기준)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1.83	1.82	1.66	0.39	0.36	0.07
전문가	1.44	1.46	1.59	-	-	-
사무종사자	1.46	1.51	1.59	0.02	0.05	0.00
서비스종사자	1.93	1.84	1.83	0.49	0.38	0.24
판매종사자	1.90	1.83	1.81	0.46	0.37	0.2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58	2.33	2.19	1.14	0.87	0.6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93	1.89	1.87	0.49	0.43	0.2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5	1.85	1.83	0.51	0.39	0.24
단순노무종사자	2.05	1.94	1.91	0.61	0.48	0.32
연령표준화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1.83	1.75	1.66	0.10	0.10	-0.02
전문가	1.73	1.65	1.68	-	-	-
사무종사자	1.83	1.72	1.71	0.10	0.07	0.03
서비스종사자	1.94	1.79	1.76	0.21	0.14	0.08
판매종사자	1.97	1.81	1.76	0.24	0.16	0.0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51	2.24	2.12	0.78	0.59	0.4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96	1.82	1.80	0.23	0.17	0.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0	1.83	1.78	0.27	0.18	0.10
단순노무종사자	2.04	1.89	1.87	0.31	0.24	0.19

8. 소결

지금까지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출산진도비와 평균 출생아수를 분석하였다. 우선 저연령층에서 출산진행비의 연도 간 차이는 첫째아 출생진도비(p1)와 둘째아 출생진도비(p2)에서 다소 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강하며, 셋째

아 출생진도비(p3)와 넷째아 출생진도비(p4)는 다소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아 출생진도비와 둘째아 출생진도비의 연도 간 차이는 주로 만혼화 경향에 따라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 시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아 출생진도비와 넷째아 출생진도비가 최근에 들어 다소 커지고 있는 경향성은 주로 과거에 고출산 경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모든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고출산순위로의 출생진도비가 2000년 대비 2005년에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의 감소폭은 대체적으로 과거 전통적으로 출산수준이 높았던 집단, 즉 저학력층,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은 2000년만 해도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05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출산율 하락을 억제하는 기여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요컨대, 2000년대 초 이래 초저출산현상 지속은 고학력층, 임금근로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관리자 등의 출산율 추가 하락보다는 과거 고출산집단의 출산율 하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2절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여기에서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결혼 및 출산 수준 변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원인 규명은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열적 분석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안점이 되는 초저출산현상 지속 기간만을 구분하여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점과 장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계열 분석이 부적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저출산현상을 구분하는 시기별로 기초지자체(230여 구·시·군)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초지자체들 간의 결혼 수준이나 출산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요인이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 분석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인구학적 요인(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들을 매개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단계 분석은 이 절에서 그리고 2단계 분석은 다음 절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는 사회적 요인들로서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적 특성(구, 시, 군), 25~34세(이하에서는 '주된 가임기'로 표현하도록 한다) 여성 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율, 주거부담으로서 가임기(15~49세)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전·월세 비율) 등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적 변수들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 실업률 그리고 취업 시 종사상지위와 직종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정책적 변수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4-8〉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모형: 변수

	변수	자료 출처
종속 변수	25~34세 여성 유배우율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유배우합계출산율(보정)	본 연구에서 추정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독립 변수	도시화 정도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군(농촌), 시(중소도시), 구(대도시)
	25~34세 여성 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5~34세 여성 중 취업자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원자료) ·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포함
	25~34세 여성 실업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원자료) · 비취업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중인 여성 포함
	25~34세 취업여성 중 임금근로자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원자료)
	25~34세 취업여성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원자료)
	25~34세 취업여성 중 사무종사자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원자료)
	25~34세 취업여성 중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원자료)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전월세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재정자립도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재정통계자료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사회복지예산 비중	-2010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재정고 홈페이지 지방재정통계자료) -2000년과 2005년은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 비중이며, 2001년과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을 이용하여 산출

회귀모형에서 시간적 인과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t 년도 그리고 독립변수는 $t-1$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시기는 2000~2001년, 2005~2006년 및 2010~2011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2001년 기간은 합계출산율이 1.3미만(초저출산현상의 진입)으로 진입하기 직전과 직후로서 초저출산사회로의 진입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005~2006년 기간은 합계출산율이 최저점(1.08)에서 벗어나기 직전과 직후로서 의미를 갖는다. 2010~2011년 기간은 최근의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

1. 유배우율에 대한 영향

가. 모형1-1(유배우율, 2001)

모형1-1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01년도 주된 가임기(25~34세) 여성의 유배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시화, 가임기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 중 사무종사자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취업률이 월등히 컸고 그 다음이 실업률과 주택점유형태, 도시화 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정도의 경우 농촌(군)에 비해 대도시(구)에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았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높은 결혼비용, 생활비용, 개인의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연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임기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전월세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가 불안정하여 상대적으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혼인연령

이 늦추어져 유배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취업 여성의 직종 중에서는 사무종사 비율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9〉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1(모형1-1)

변수	모형1-1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4.351 (1.710)*	-0.215
시	1.422 (1.078)	0.071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87 (0.059)	-0.105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162 (0.043)***	-0.238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686 (0.057)***	-0.537
25~34세 여성의 실업률	-1.524 (0.286)***	-0.255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0 (0.001)	0.014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132 (0.077)	-0.120
사무종사자 비율	-0.246 (0.070)***	-0.150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02 (0.001)	-0.037
재정자립도	-0.011 (0.025)	-0.023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 비중	0.050 (0.076)	0.036
상수	129.330	
F	53.808***	
Adj. R ²	0.733	
N	232	

* p < 0.05, ** p < 0.01, *** p < 0.001

나. 모형1-2(유배우율, 2006)

모형1-2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06년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시화 정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가임기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취업률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실업률과 도시화 정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군)에 비해 대도시(구)에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주된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가 실질적으로 혼인연령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이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으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6(모형1-2)

변수	모형1-2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6.466 (1.573)***	-0.283
시	1.207 (1.084)	0.054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230 (0.051)***	-0.262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113 (0.039)**	-0.143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578 (0.052)***	-0.383
25~34세 여성의 실업률	-1.113 (0.163)***	-0.286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10 (0.054)	0.011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29 (0.077)	-0.021
사무종사자 비율	-0.013 (0.069)	-0.007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72 (0.061)	-0.037
재정자립도	-0.016 (0.026)	-0.027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 비중	0.060 (0.043)	0.059
상수	115.836	
F	89.691***	
Adj. R ²	0.833	
N	229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모형1-3(유배우율, 2011)

기초지자체의 2011년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시화 정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가임기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 중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및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영향력은 취업률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가임기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도시화 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11(모형1-3)

변수	모형1-3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5.546 (1.934)**	-0.227
시	-0.851 (1.196)	-0.036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330 (0.070)***	-0.284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190 (0.046)***	-0.247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699 (0.061)***	-0.427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789 (0.230)***	-0.123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20 (0.099)	0.011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126 (0.093)	0.075
사무종사자 비율	-0.011 (0.093)	-0.005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95 (0.021)***	-0.137
재정자립도	0.070 (0.032)*	0.102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0.139 (0.055)*	-0.163
상수	129.789	
F	81.347***	
Adj. R ²	0.809	
N	229	

* p < 0.05, ** p < 0.01, *** p < 0.001

농촌(군)에 비해 대도시(구)에서,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주된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임기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로 전월세 비율이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 관련 변수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 비중이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났다.

라. 시기 간 유배우율의 사회경제적 원인 비교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2001년, 2006년, 2011년 각각 살펴보았을 때, 도시화 정도, 가임기 가구주의 주택점유형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과 실업 증가, 도시 거주 그리고 가임세대의 주거 불안정은 한국사회가 2001년 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하고, 그 후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 내내 유배우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특히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의 경우 모든 시기에 유배우율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결혼연령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한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면 경력단절 등을 우려하여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주된 가임기 여성들이 취업을 위하여 대기 혹은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실업상태도 모든 시기에 결혼을 연기시켜 유배우율을 낮추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유배우율에 대한 대도시의 부적(-) 영향력은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이성들이 많아서 교제할 기회는 증가할지라도 결혼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결혼에 대한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약한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시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의 부적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가임기 인구가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결혼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불안정이 유배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시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은 2001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06년과 2011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가 결혼을 연기시켜 유배우율을 낮추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연기를 통한 유배우율 하락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 및 실업률과 달리, 직종 유형별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유배우율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 연기 등이 직종 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만, 2001년에는 사무직 그리고 2011년에는 서비스·판매직 직종이 유배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2001년 초저출산현상 진입 시에는 사무직 여성의 결혼 연기 등이 그리고 2011년 최근에는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결혼연기 등이 상대적으로 더 빠

르게 진행하여 지역 간 유배우율 차이를 증가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가 유배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결혼 연기 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초저출산현상에 진입한 이래 모든 시기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1년에 한해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11년에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2001년과 2006년에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 예산이 주된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한편으로는 결혼관련 대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초지자체 별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나 혹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비례하여 결혼 관련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축하금 등의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유배우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결혼 연기 등의 경향이 높아서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표 4-12〉 여성(25~34세) 유배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모형 간 비교

변수	2001	2006	2011
지역구분(준거: 군)			
구	-	---	--
시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	---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	--	---
25~34세 여성의 취업률	---	---	---
25~34세 여성의 실업률	---	---	---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사무종사자 비율	---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사회복지예산 비중			-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영향

가. 모형2-1(유배우출산율, 2001)

기초지자체의 2001년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시화 정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취업여성 중 관리자 등 비율과 사무종사자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취업률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실업률, 도시화 정도,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군)에 비해 대도시(구)에서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았는데,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배우 여성들 사이에 기회비용, 생활비용(자녀양육비 포함)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자녀 선호도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

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 중인 주된 가임기 여성들 중에서도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여성들이 일과 자녀출산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며, 그러한 경향은 특히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더욱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4-13〉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1(모형2-1)

변수	모형2-1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0.127 (0.060)*	-0.251
시	0.035 (0.038)	0.070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00 (0.002)	-0.014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002 (0.001)	0.108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015 (0.002)***	-0.466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053 (0.010)***	-0.352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0 (0.000)	0.005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06 (0.003)*	-0.212
사무종사자 비율	-0.010 (0.002)***	-0.247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00 (0.000)	0.018
재정자립도	0.001 (0.001)	0.078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 비중	0.003 (0.003)	0.073
상수	2.729	
F	18.764***	
Adj. R ²	0.480	
N	232	

* p < 0.05, ** p < 0.01, *** p < 0.001

나. 모형2-2(유배우출산율, 2006)

모형2-2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06년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도시화 정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가임기 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취업여성 중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영향력이 큰 변수는 취업률, 실업률, 도시화 정도이었고 그 다음이 취업여성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 등의 순이었다.

농촌(군)에 비해 대도시(구)에서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농촌과 중소도시 간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농촌지역 유배우여성 역시 중소도시 유배우여성의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이 높을수록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았다. 반면,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이 높을수록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월세 임차 가구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가구로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취업관련 변수들 중에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여성 중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만큼 유배우여성들이 일과 자녀출산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직뿐만 아니라 약하나마 서비스·판매직 종사 여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6(모형2-2)

변수	모형2-2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0.137 (0.046)**	-0.308
시	-0.028 (0.032)	-0.064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03 (0.002)*	-0.180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003 (0.001)*	0.171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011 (0.002)***	-0.379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025 (0.005)***	-0.332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0 (0.002)	0.002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07 (0.002)**	-0.262
사무종사자 비율	-0.006 (0.002)**	-0.149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04 (0.002)*	-0.101
재정자립도	0.001 (0.001)	0.088
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 비중	0.002 (0.001)	0.127
상수		2.485
F		28.720***
Adj. R ²		0.593
N		229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모형2-3(유배우출산율, 2011)

모형2-3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11년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취업률 및 실업률로 나타났다. 즉,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교육수준, 실업률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화 정도, 가임기 인구의 거주 불안정성, 주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와 직업,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들어 유배우여성들의 출산수준이 주거상태나 종사상지위 및 직업과 상관없이 유사한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4-15〉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11(모형2-3)

변수	모형2-3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0.048 (0.101)	-0.068
시	-0.015 (0.063)	-0.021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08 (0.004)*	-0.230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001 (0.002)	-0.057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014 (0.003)***	-0.300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027 (0.012)*	-0.144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2 (0.005)	0.037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03 (0.005)	-0.069
사무종사자 비율	-0.008 (0.005)	-0.116
서비스매종사자 비율	-0.001 (0.001)	-0.039
재정자립도	0.002 (0.002)	0.104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5 (0.003)	-0.199
상수	3.475	
F	11.990***	
Adj. R ²	0.366	
N	229	

* p < 0.05, ** p < 0.01, *** p < 0.001

라. 시기 간 유배우출산율의 사회경제적 원인 비교

지금까지 시기별로 유배우 여성의 출산수준(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은 세 시기 모두에서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는 일-가정 양립 곤란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현상 진입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취업 중인 주된 가임기 여성의 직업 유형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2001년과 2006년에 사무직 및 관리자·전문가 직종은 유배우출산율에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비스·판매직은 2006년에만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저출산현상 진입 시 직무 특성상 일-가정이 곤란한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배우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을 축소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면, 출산율이 최저 수준을 낮아진 2000년대 중반에는 그러한 경향이 서비스·판매직에까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인 2011년에는 노무직·기능직 등에까지 확산하여 직종 간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점차 없어져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지위에 따른 유배우 출산율의 차이는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최근까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종사상지위 간 유배우출산율 차이가 아주 좁혀져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실업률도 취업률과 마찬가지로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최근까지 일관성 있게 유배우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자녀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혼여성일자리도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실질적인 가임기간이 짧아져 출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주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초저출산 진입 이래 최근까지 유배우출산율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역으로 비임금근로자도 일-가정 양립 곤란이나 혹은 수입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 임금근로자와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도시화 정도의 영향력을 보면, 2001년과 2006년에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배우출산율이 낮았으나, 2010년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농촌과 중소도시 간의 유배우출산율 차이는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최근까지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농촌이나 중소도시 모두 장기간에 걸쳐 유배우출산율이 낮아져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촌과 대도시 간 차이도 없어져 유배우여성의 낮은 출산율이 지역 구분 없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가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초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유배우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효과가 실제 유배우여성의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은 2006년에만 유배우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을 지난 후 다소 상승하였는데, 그간 불경기 등의 이유로 억제되었던 저소득층인 전월세 임차 가구 등의 유배우여성의 출산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전 기간에 걸쳐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이 중앙정부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지역 간 유배우출산율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비례하여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4-16〉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모형 간 비교

변수	2001	2006	2011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	--	
시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	-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	
25~34세 여성의 취업률	---	---	---
25~34세 여성의 실업률	---	---	-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	--	
사무종사자 비율	---	--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5, -- p < 0.01, --- p < 0.001

제3절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로 구성된다. 앞선 1단계 분석에서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각각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규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대

한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감안하여 2단계 분석으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모형3-1(합계출산율, 2001)

모형3-1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01년도 합계출산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시화 정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취업여성 중 사무종사자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취업률, 실업률, 도시화 정도, 취업여성 중 사무종사자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군)에 비해 대도시(구)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았으며, 농촌과 중소도시(시) 간에 합계출산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농촌과 중소도시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기인한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 낮게 나타난 결과에 기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혼인연령이 늦추어져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일-가정양립이 곤란하여 결혼 후에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직종 중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사무종사자 비율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작용을 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 비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직종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리자·전문가 비율은 유배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배우율의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력에 비해 더 강하여,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가구주 중 전월세 비율이 높을수록 유배우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7〉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1(모형3-1)

변수	모형3-1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0.147 (0.052)**	-0.307
시	-0.003 (0.033)	-0.006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01 (0.002)	-0.064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000 (0.001)	-0.029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014 (0.002)***	-0.459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045 (0.009)***	-0.318
25~34세 취업여성 중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0 (0.000)	0.004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03 (0.002)	-0.135
사무종사자 비율	-0.009 (0.002)***	-0.229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00 (0.000)	0.015
재정자립도	0.000 (0.001)	0.039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3 (0.002)	0.089
상수	2.492	
F	25.668***	
Adj. R ²	0.562	
N	232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외 요인들로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주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다.

2. 모형3-2(합계출산율, 2006)

모형3-2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06년도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취업여성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영향력이 큰 변수는 실업률과 취업률이었다고 그 다음이 취업여성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이었다.

이 시기에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직종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 직종 중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유배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유배우출산율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에 기인한다.

한편, 주된 가임기 여성의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 비율이 유배우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배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배우출산율보다 유배우율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8〉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06(모형3-2)

변수	모형3-2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0.067 (0.047)	-0.149
시	0.027 (0.032)	0.063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01 (0.002)	-0.086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000 (0.001)	-0.024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012 (0.002)***	-0.399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031 (0.005)***	-0.400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0 (0.002)	0.021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07 (0.002)**	-0.248
사무종사자 비율	-0.004 (0.002)	-0.105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03 (0.002)	-0.082
재정자립도	0.001 (0.001)	0.072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1 (0.001)	0.057
상수	2.329	
F	29.131***	
Adj. R ²	0.594	
N	232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외 요인들로 도시화 정도,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주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종사상지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의 경우에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전월세 비율의 경우 유배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배우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호 상쇄하여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 정도(농촌 대비 대도시)와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은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 낮추는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대 증반에 합계출산율이 대부분 계층에서 급격하게 하락하여 초저출산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3. 모형3-3(합계출산율, 2011)

모형3-3의 결과, 기초지자체의 2011년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alpha < 0.05$)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취업률 및 실업률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취업률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교육수준, 실업률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된 가임기 여성들 중 대학 이상인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았으며,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 취업률 및 실업률 모두 유배우율을 낮추고,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한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화 정도,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의 직종 중 서비스·판매직 종사 비율,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이들 요인이 유배우율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국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배우율의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을 알 수 있겠다.

〈표 4-19〉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2011(모형3-3)

변수	모형3-3	
	B (s.e.)	β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0.067 (0.072)	-0.114
시	-0.017 (0.044)	-0.030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0.005 (0.003)*	-0.185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0.003 (0.002)	-0.171
25~34세 여성의 취업률	-0.013 (0.002)***	-0.341
25~34세 여성의 실업률	-0.023 (0.009)**	-0.153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0.001 (0.004)	-0.022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0.002 (0.003)	-0.047
사무종사자 비율	-0.007 (0.003)	-0.115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0.001 (0.001)	-0.078
재정자립도	0.002 (0.001)	0.095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4 (0.002)	-0.188
상수	3.216	
F	23.561***	
Adj. R ²	0.542	
N	230	

* p < 0.05, ** p < 0.01, *** p < 0.001

4. 시기 간 합계출산율의 사회경제적 원인 비교

지금까지 시기별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모든 시기에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이었다. 모든 시기에 이들 요인들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과 일치한다. 즉,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최근까지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시 경력단절

이 만연화되어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할수록 결혼을 연기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주된 가임기 여성들이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시화 정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01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도시화 정도의 유배우율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모든 시기에 나타나고, 유배우출산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2001년과 2006년에 나타난다. 이는 유배우율의 영향력과 유배우출산율의 영향력이 합해지면서 합계출산율 수준이 기초지자체 간 오히려 유사해지게 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은 2011년에만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시기는 2006년과 2011년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그 결과로서 합계출산율도 낮아졌으나, 기초지자체 간 차이는 오히려 좁혀져 2006년에는 유의미성이 상실되었고 2011년에는 약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임기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은 모든 기간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 비율이 세 시기 모두에서 유배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2006년에 한정해 유배우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월세 비율의 유배우율에 대한 부적(-) 영향력과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정적(+) 영향력이 서로 상쇄되어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향력이 미세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2001년과 2011년에는 유배우율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영향력은 무의미하나, 두 요인의 영향력을 합하면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모든 기간에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에게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모든 시기에서 유배우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배우율에는 2011년에 한정하여 재정자립도의 경우 정적(+) 영향을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요인의 영향력을 합한 결과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들의 재정이나 복지예산비중이 저출산대책의 강도와 무관할 수 있으며, 설사 저출산대책과 연계될 수 있을지라도 아직 가시적으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님을 의미한다.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의 직업의 경우에는 2001년과 2006년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2001년에는 사무종사자 비율이 그리고 2006년에는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2001년에는 사무직 종사 비율이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작용을 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어떠한 직종도 유배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모두 유배우출산율은 낮추는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해석된다.

〈표 4-20〉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모형 간 비교

변수	2001	2006	2011
도시화 정도(준거: 군)			
구	--		
시			
25~34세 여성의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대학 이상 비율			-
가임기 가구주(15~49세)의 주택점유형태(준거: 자가무상)			
전월세 비율			
25~34세 여성의 취업률	---	---	---
25~34세 여성의 실업률	---	---	--
25~34세 취업여성 종사상지위(준거: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25~34세 취업여성의 직업(준거:노무기능농어업)			
관리자·전문가 비율		--	
사무종사자 비율	---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5, -- p < 0.01, --- p < 0.001

제4절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한 종합논의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진도비와 평균 출생아수를 초저출산 지속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증가에 따라 첫째아 출생진도비와 둘째아 출생진도비는 일정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반면, 셋째아 출생진도비와 넷째아 출산진도비는 급격하게 낮아져 그만큼 평균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수준의 감소폭이 큰 집단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출산수준이 높았던 집단, 즉 저학력층, 취업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회경

제적 집단들은 2000년만 해도 고출산순위로의 이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05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0년에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출산율 하락을 억제하는 기여도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즉, 초저출산현상 지속은 고학력층, 비취업집단,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과거 전통적인 고출산 집단의 출산율 하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유배우율이 낮고, 유배우출산율은 2001년과 2006년에 낮게 나타난다. 이들 두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대도시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영향은 2001년에만 나타난다. 농촌과 중소도시 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진도비 및 평균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하락시켰으나, 두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합해져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2011년에만 나타난다. 즉, 전통적으로 고출산집단인 저학력층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학력 간 차이가 미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임기(15~49세) 가구주의 전월세 비율은 2001년 이래 모든 시기에 유배우율을 낮춘 반면, 2006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두 인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의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거 불안정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보다는 출산율을 전국적으로 하락시켜 지자체 간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주된 가임기(25~34세)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일관되게 두 인구학적 요인 즉,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최근까지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일관되게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합계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비임금근로자(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결혼 및 출산 행태가 임금근로자와 유사해져 결과적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합계출산율 차이가 미세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러한 경향은 앞서 출생진도비와 평균 출생아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취업여성의 직업 중 사무종사자 비율은 2001년에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낮추어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2006년에는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유배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2011년에는 모든 직종들이 유배우율(서비스·판매직만 예외적)과 유배우출산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합계출산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최근에 올수록 과거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직업 종사자(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들의 출산율이 급

격하게 낮아져 직종 간 출산수준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다. 직종 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는 경향은 결과적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2011년에 재정자립도가 유배우율에 정적(+) 영향을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부적(-) 영향을 나타냈으나 두 요인의 영향력을 합한 결과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오히려 미세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저출산대책의 강도와 무관할 수 있으며, 설사 저출산 대책과 연계될 수 있을지라도 아직 가시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다.

〈표 4-21〉 초저출산 지속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종합

변수	2001			2006			2011		
	유배우 율	유배우 출산율	합계출 산율	유배우 율	유배우 출산율	합계출 산율	유배우 율	유배우 출산율	합계출 산율
도시화 정도(군)									
구	-	-	--	---	--		--		
시									
대학 이상 비율				---	-		---	-	-
전월세 비율	---			--	+		---		
취업률	---	---	---	---	---	---	---	---	---
실업률	---	---	---	---	---	---	---	-	--
임금근로자 비율									
관리자·전문가 비율		-			--	--			
사무종사자 비율	---	---	---		--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					-		---		
재정자립도							+		
사회복지예산 비중							-		

+ p <0.05, ++ p <0.01, +++ p <0.001

- p <0.05, -- p <0.01, --- p <0.001



제5장

초저출산현상 탈피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유배우율에 관한 정책과제

제2절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접근

5

초저출산현상 탈피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인구학적 원인은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측정을 통해 진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원인은 회귀분석을 통해 진단하였다. 여기에서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기초로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절 유배우율에 관한 정책과제

1. 필요성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으로 두 인구학적 요인 즉, 유배우율(만혼화 정도에 의해 결정)과 유배우출산율(결혼 후 출산력) 중 유배우율 하락의 기여도가 유배우출산율 증가의 기여도보다 압도적으로 커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 들어 유배우율 하락의 기여도가 유배우출산율 증가의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이 1.3 이상으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혼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향후 정책과제 중 만혼화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만 할 것이다.

2. 인구학적 목표

사실 유배우율은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감소율을 보면 20~24세, 25~29세, 15~19세, 30~34세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시스템, 여성의 노동참가 등을 고려할 때 15~19세나 20~24세에서 더 이상 결혼을 기대하기 곤란한 추세(trend)이다. 결국 유배우율 하락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은 25~29세와 30~34세이다. 25~29세 유배우율은 2013년에 25%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30~34세 유배우율도 63.8%로 낮아져 조만간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25~29세 출산율이 이미 30~34세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며,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30~34세 출산율도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아 25~29세 출산율의 하락 폭을 완전히 보충(catch-up)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인구학적 원인에 관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 번째로 25~29세 유배우율을 회복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 30~34세 유배우율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3. 주요 정책대상(target group)

만혼화는 이미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혼화 수준이나 속도 등은 사회경제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요컨대, 만혼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집단, 정책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집단 등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 결과, 지역의 유배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대도시, 대학 이상 고학력층, 전월세 거주비율, 실업률, 관

리자전문가 비율 및 사무종사자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하는데 정책 대상을 두고 향후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정책과제

가. 취업준비 지원

만혼화를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교육기간이 늘어진다다가 교육 종료 후 취업을 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간 증가는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마치는 경향이 높았으나 점차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육을 마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기간 증가는 대체적으로 취업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보다 높은 수입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로서 교육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을지라도 높은 수입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취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나라 입직연령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¹⁾.

한국사회에서 고학력과 더불어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은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늦추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유배우율을 현

11) 남자들의 평균 입직연령은 22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7.2세임(매일경제, 2000.05.22. 기사 "[학습혁명 보고서] 韓國 평생학습 비율 OECD國 중 최하위")

저히 낮추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 수는 없다. 결국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전공과 연관된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은 전공과 직무간 높은 불일치정도 및 대학교육과 직업업무 간 낮은 상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 및 자체시설에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취업 후에도 비정규직 등 고용의 불안정 상태 지속은 그만큼 결혼을 늦추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인턴제나 비정규직이 원활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도입되고, 새로운 중요한 고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 일-결혼 양립 지원

우리나라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워서이다(이삼식·최효진·오영희 외, 2009). 취업 시에도 야근, 휴일근무 등 장시간 근로관행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기 위한 이성교제가 어렵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에 분주하여 결혼생활 자체가 장애가 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이삼식·윤여원·이지혜, 2012). 현재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일부이지만 결혼을 앞둔 미혼층에 대한 일과 결혼준비의 양립에 보다 특화된 정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자체가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용문화와 인식 차원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만큼, 각종 캠페인 등에서 미혼층의 일-결혼준비 양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주거 지원 강화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 마련 비용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어 있어 결혼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구입비는 물론 전월세 값도 폭등하여 그만큼 결혼생활을 위한 집 마련에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도 결혼이 지연되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제도’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젊은층이 많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주된 이유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대상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지나치게 저소득층 중심) 현실적으로 수요가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제도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액 자체도 수도권 등에서 폭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이나 전월세를 감당하는데 턱 없이 낮고 이율도 시중보다는 낮다고 하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등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결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거지

원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자격조건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 초기의 부부들에게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도 수도권 등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여 대출금액과 대출조건(소득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며, 이자도 초장기-초저리 상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현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이자 등을 보전해 주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혼부부 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제2절 유배우출산율에 대한 접근

1. 필요성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 유배우출산율 증가가 유배우율의 하락의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합계출산율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배우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여기에서는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을 의미)은 2013년 기준으로 1.44(실측치는 1.19)에 그칠 것이다. 여기에서 2013년도 보정 유배우합계출산율은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유배우율이 약 83%에 이를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즉, 20대와 30대초까지 80% 이상이 결혼을 한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이 1.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결혼 후에도 출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유배우율 하락이 중

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유배우출산율이 2명(기혼여성이 가임기 동안 평균적으로 낳은 자녀수로서)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가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반등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배우율 향상과 더불어 유배우출산율 제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인구학적 목표

앞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유배우출산율은 만혼화와 만산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대 유배우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전환하여 1992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우율을 보정한 합계출산율이 1.44명으로 기혼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는 자녀수가 2명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게다가 만혼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강화시킨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결혼연령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인구학적으로 유배우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와 더불어 결혼을 한 유배우여성의 출산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에 실질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수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증가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5~19세를 제외하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25~29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과 30~34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만혼화의 영향에 따라 출산을 늦게 시작하는 만큼 임신능력이 약화(난임 등)되는 문제로 인하여 특히 고연령층에서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 주요 정책대상(target group)

출생진도비와 평균 출생아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대졸 이상 학력층, 임금근로자, 전문직·관리직·사무직 등은 과거에 이미 출산수준이 낮아졌던 계층들이며, 중소도시와 농촌, 중졸 이하 학력층, 비임금근로자, 농어업직·노무직·기능직·서비스직·판매직 등은 최근에 출산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진 계층들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아 출산을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했던 계층들의 출산수준이 낮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으로 진입하였고 여전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과거부터 출산수준이 낮았던 계층들은 전통적으로 출산수준이 높았으나 최근에 급락한 계층들에 비해 출산을 회복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대책들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출산수준이 낮았던 계층들을 타겟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들은 두 경로(track)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부터 저출산 성향이 강하였던 집단과 전통적으로 고출산의 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접근을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유배우출산율이 전통적으로 낮은 집단으로는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층,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임금근로자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낮아져 상대적으로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는 집단으로는 농촌과 중소도시 거주자, 저학력층, 비임금근로자,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직·노무직 및 농림어업직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아무래도 유배우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은 후자의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대상 집단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정책과제

가. 건강한 임신 보장

결혼 후에도 출산율(유배우출산율)이 낮아지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가임능력 저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이 증가하면서 후천적으로 환경오염, 스트레스, 생활습관(흡연, 음주), 생리호르몬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만혼화를 완화하여 유배우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만혼화 정도가 나빠지는 것을 완화 내지 중지시킬 수 있을지 언정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고연령층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기정사실화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연령층에서도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 전 건강, 임신 중 건강, 출산 후 건강, 임신 간 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내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른 검진들을 체계화하고, 이중 필수적인 검진 시기 및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여 보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임신 전후 전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검진 등을 통해 임신능력 저하 내지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검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적인 노력으로 임신능력 저하를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시험관시술이나 체

외수정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곤란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횟수를 현재 3회에서 상향조정하고 지원액도 실비용의 50% 수준에서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횟수와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모두가 치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임 치료 자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난임 부부 중 상당 비율이 경제적 부담 이외의 사유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난임치료휴가를 무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난임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최대 1년간으로 설정하되, 실제로는 임신에 성공한 기간까지(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거하여) 휴가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임신 후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출산간격 단축 지원

유배우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자녀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만혼화 경향에 따라 늦게 출산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출산간격이 짧을 경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간격을 짧게 하여 연속적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보다 짧은 간격으로 자녀들을 출산한 경우 자녀양육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

며, 어린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것 역시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쌍생아 출산 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유사한 맥락일 것이다.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만 2세 이하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일정 조건(예를 들어 2세 미만의 자녀출산간격을 가진 경우)에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육아휴직 시에는 위 조건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두 자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고 부와 모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 증액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맥락이며,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과 유사하다). 부와 모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시 이용 시에도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도록 한다(현행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부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12일 간 제공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확대하여 2세 미만의 간격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2~18일(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시에는 12일, 50% 미만인 경우에는 18일) 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짧은 간격으로 출산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다. 비용 지원

유배우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보다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자녀양육비일 것

이다. 프랑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자녀양육비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여 본격적인 반등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부담은 크지만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재원이 막대한 만큼, 기존의 제도들을 통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맞벌이부부만이 0~2세 자녀를 시설에서 돌볼 수 있게 하고, 비맞벌이부부를 포함하여 0~2세 자녀들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동수당액은 아동의 연령과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재원으로는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등,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액 중 절약된 금액, 국고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할 대상 아동의 상한연령은 2세, 5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도록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아동수당액은 첫째아 기준으로 월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물가 등과 연동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라. 시간 지원

어린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돌보기 위해서는 시설에 맡기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부와 모에 자녀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만으로 부와 모에 충분한 자녀양육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게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등이 출산 직후에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사용할 수 없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소득 상실기간 동안 여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을 회피하거나 단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고용보험의 재원과도 연계되어 있다. 결국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험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세 시기(1992~1997, 1997~2005, 2005~2013)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 고찰, 외국 방문 면담, 인구학적 기법 적용, 다변량분석 실시 등이다. 인구학적 기법으로 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유배우합계출산율, 보정유배우합계출산율), 템포효과(tempo effect),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 등을 적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은 전국 기초지자체를 분석단위로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을 매개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우선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초저출산현상 진입에는 25~29세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으로 인해 30대 출산율이 높아졌으나 25~29세 출산율 하락폭을 보충(catch-up)하지 못한 결과이다. 30대 출산율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고 있는 두 인구학적 요인 중 하나인 유

배우율은 1992년에 비해 2013년에 25~29세 연령층은 1/3 수준으로 그리고 30~34세 연령층도 2/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을 연기하는 전이현상이 발생하여 앞선 세대의 결혼지연을 catch-up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20대 유배우출산율이 2005년까지 급락하여 30대 유배우출산율의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유배우출산율은 최근에 높아져 199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30대 유배우출산율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넷째, 1992~1997년에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부적 영향력 모두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특히 만혼화가 주도적 역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7~2005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을 상회한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에 비해 약간만 커지는데 그침으로써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끝으로, 출산연기 효과(템포효과)는 1992~1997년간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97~2005년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3년간에도 여전히 출산연기 효과가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어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초저출산현상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첫째아만 두는 비율과 둘째아만 두는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여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셋째아나 넷째아까지(특히 셋째아) 출산을

이행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결과적으로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사회경제적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집단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즉, 초저출산현상 지속은 고학력층, 임금근로자,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전통적인 고출산집단(저학력층, 자영업자, 농림어업, 단순노무, 장차 기계조작, 기능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등)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다변량 분석 결과로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두 요인의 작용 결과 농촌과 대도시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좁혀져 2001년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농촌과 중소도시 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차이는 이전부터 유의미하지 않다. 저출산현상의 중소도시 및 농촌까지로 확대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나 두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학력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어, 2011년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 이는 최근까지도 고학력화가 출산율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가임기에 있는 가구의 전월세 비율은 모든 시기에 유배우율을 낮춘 반면, 2006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다. 두 인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점유형태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주거불안정이 출산율을 전국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초저출산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일관되게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는 일관되게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고출산 집단이었던 비임금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 행태가 임금근로자와 유사해져 합계출산율 차이가 미세해졌기 때문이다. 직업 중에서는 사무종사자 비율이 2001년에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낮추어 그리고 2006년에는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유배우출산율만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외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전통적인 고출산 직종 종사자(농림어업, 단순노무, 장차·기계조작 등, 기능원 등, 서비스, 판매 종사자 등)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직종 간 출산수준의 차이가 아주 미세해졌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들은 초저출산현상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인구학적 원인 및 사회경제적 원인에 근거를 두고 개발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원인으로 결혼연령이 계속 증가하면서 만혼화가 심화되어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유배우출산율 상승을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만혼화 현상을 억제하여 유배우율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만혼화 현상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배우출산율도 현 수준보다 더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준다.

결혼의 용이성을 제고하여 유배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취업준비 단축 지원, 일-결혼 양립 지원, 주거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취업준비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전공과 연관된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시켜 전공과 직무간 높은 불일치정도 및 대학교육과 직업업무 간 낮은 상관성을 보완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인턴제나 비정규직이 원활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일-결혼 양립 지원을 위하여 현재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부로 결혼을 앞둔 미혼층에 대한 일과 결혼준비의 양립에 보다 특화된 정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 초기의 부부들에게의 우선순위 상향, 지역에 따른 대출금액과 대출조건(소득기준)의 탄력적 적용, 초장기-초저리 상환, 국가에 의한 이자 등 보전,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이 중요하다.

유배우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과제로는 건강한 임신 보장, 출산간격 단축 지원, 비용지원, 시간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 후 가임능력 저하로 인한 유배우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건강한 임신 보장은 임신 전 건강, 임신 중 건강, 출산 후 건강, 임신 간 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책 내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검진들을 체계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검진 시기 및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여 보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현재 3회에서 상향조정하고 지원액도 실비용의 50% 수준에서 더 증액하며, 지원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횟수와 지원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비경제적으로 난임치료휴가 무급 제공을 고려한다.

둘째, 출산간격 단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예를 들어 2세 미만의 자녀출산간격을 가진 경우) 하에 양육수당을 증액하고, 육아휴직 시급여를 증액하며, 부와 모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시 부

부 모두에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12일 간 제공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2세 미만 간격으로 자녀를 출산한 자에 한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시에는 12일, 50% 미만인 경우에는 18일 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짧은 간격으로 출산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셋째, 자녀양육 비용 지원 방안으로 예산부담은 크지만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여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수당액은 아동의 연령과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재원으로는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등,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액 중 절약된 금액, 국고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할 대상 아동의 상한연령은 2세, 5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도록 한다.

넷째, 자녀양육 시간 지원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강화하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급여의 비현실적 수준, 인력대체 곤란 등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험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건의이다. 향후 정책들은 두 경로(track)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부터 저출산 성향이 강하였던 집단과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전자는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층,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임금근로자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농촌과 중소도시 거주자, 저학력층, 비임금근로자, 서비

스·판매직과 기능직·노무직 및 농림어업직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은 후자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 추진한 정책들일지라도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과감히 개선 내지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향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출산순위에 의거하여 확연한 차별을 줌으로써 예산 집행을 추가 출산 이행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이나 목표가 모호한 정책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들 간 조화(best policy mix)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특정한 정책 하나에 보다 집중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라도 다른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배우율이나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 간 조화를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는 없다. 선택-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두섭(2008).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5-30,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개발·확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철(2009). “제2차 슈뢰더 정부 이후 독일의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5(4), pp.245~280.
- 김은정·이성림·이완정·김한나(2011).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헌·이삼식·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pp.1~23.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pp.107~135.
- 김현식·김지연(2012).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김동희·이승희(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김윤경·김영아(2009).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 -저출산대책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서문희·박세경·윤홍식·진미정(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분석,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윤여원·이지혜(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시원·김영기·이성진(20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8(1), pp.83~103.
- 이진숙(2012). “독일 가족정책의 쟁점과 변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 『저출산부문』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진숙·김태원(2014). “독일의 저출산문제와 최근 대응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8(1), pp. 3~26.
-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 pp. 117~144.
- 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준욱·송헌재(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한국보건조세연구원.
- 행정자치부(2001). 지방재정연감.
- 행정자치부(2006). 지방재정연감.
- Adsera, A. (2011). Where are the babies? Labor market conditions and fertility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 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7(1), 1~32.
- Bongaarts, J. &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Frejka, T., Jones, G. W., & Sardon, J. P.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579~606.
- Frejka, T., Ross, J. (2001). Paths to Subreplacement fertility : the empirical evide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Supplement; Global Fertility Transition(2001), 213~254.
- Kravdal, Ø. (2002). The impact of individual and aggregate unemployment on fertility in Norway. *Demographic Research*, 6(10), 263~294.

- Murder, C. H. (2006). Home-ownership an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1(3), 281~298.
- Oppenheimer, V. K., Kalmijn, M., & Lim, N. (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 Orsal, D. D., & Goldstein, J. R. (2010, April).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conomic conditions on fertility. In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Dallas, Texas*.
- Retherford, R. D., Ogawa, N., Matsukura, R. (2001).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65~102.
- Rindfuss, R. R., & Brauner-Otto, S. R. (2008). Institution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mplications for fertility tempo in low-fertility setting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2008*, 57.
- Rindfuss, R. R., Guilkey, D. K., Morgan, S. P., & Kravdal, Ø. (2010).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 725~748.
- Simon, C. J., & Tamura, R. F.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1), 33~42.
- Sobotka, T., Skirbekk, V., Philipov, D. (2011).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2), 267~306.

17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http://www.bib-demographie.de>)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soc/oecdfamilydatabase.htm>)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